JANUARY 2023 Vol.386

나라경제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nara.kdi.re.kr

2023
01

특집

2023 한국경제를 위한 제언

특별인터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슈
진격의 생활물류서비스 시대

연중기획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우리

nara.kdi.re.kr
www.facebook.com/kdinara1990

ISSN 1227-8033

KDI 경제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1월

용혜원

일월은
가장 깨끗하게 찾아온다
새로운 시작으로
꿈이 생기고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다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기대감이 커진다

올해는
흐르는 강물처럼 살고 싶다
올해는
태양처럼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

올해는
먹구름이 몰려와
비도 종종 내리지만
햇살이 가득한 날들이 많을 것이다

올해는
일한 기쁨이 수북하게 쌓이고
사랑이란 별 하나
가슴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처음 사랑으로 너에게』 중에서



황예나 일러스트 작가

나라경제

2023년 1월호 통권 386호

특집

2023 한국경제를 위한 제언

10 **기회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열린 사회**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12 **혁신성장을 넘어 전략성장으로**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14 **글로벌 복합위기 속 한국경제,**
긴 안목으로 미래 기회 잡을 내실 다져야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16 **다시 찾아온 위기, 산업 대전환으로 극복하자**
주현 산업연구원장

18 **미룰 수 없는 노동개혁,**
국민 눈높이에 맞춰 중장기까지 대비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20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위한 굳건한 토대 마련을**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22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 역량 결집이 시급**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특별인터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4 **“복지예산은 재정건전성 저해하는 지출 아닌**
‘미래성장 뒷받침’하는 투자”

디지털 『나라경제』를 만나보세요!

nara.kdi.re.kr
www.facebook.com/kdinara1990
nara_kdi
blog.naver.com/kdi_nara

이슈

진격의 생활물류서비스 시대

30 **플랫폼·데이터 등에 업고 매출 일으키는 풀필먼트로 진화 중**
엄지용 비욘드엑스 대표

31 **물류센터 택배 작업, 이제 로봇이 한다고?**
홍종욱 파스토 대표

32 **택배, 유통, 배달…일상이 된 생활물류서비스**
『나라경제』 편집실

34 **"라스트마일시장의 문제에서 시작된 배달로봇 개발…**
B2C·B2B 플랫폼도 개발할 것"
강기혁 뉴빌리티 부대표

36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육성 위해**
기업 규제혁신, 근로여건 개선 등 추진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38 **외산 기술에서 벗어나 R&D 투자 확대하고**
물류 분야 설비·장비 표준화 추진해야
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장



연중기획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우리

지방에 산다는 것

40 **이제는 지방시대 열어젖힐 때**
오영환 중앙일보 지역전문기자 겸 대구지사장

42 **확대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나라경제』 편집실

44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
김채원 순천연향초 교사

45 **『나라경제』 독자에게 듣는 '지방에 살아보니…'**

46 **문제의 핵심은 '쏠림', 국토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자**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경제정책해설

50 **'복지 사각지대' 온 마을이 돕는 체계 만든다**
오진희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52 **'공공임대+공공분양' 균형 잡힌 공급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넓힌다
이소영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54 **"중소기업 대표님, 더 이상 교육훈련 주저하지 마세요"**
김종호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장

56 **북극점에서 남극 내륙까지,**
대한민국의 새로운 극지 여정이 시작된다
노재옥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세계는 지금

58 **2023년 세계경제, 위기에 맞서서**
이호근 주OECD대표부 참사관

61 **20년 논의 끝맺을 결심**
이진용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칼럼

02 시(詩)작
1월
용혜원 시인

48 오늘도 미식
미식의 시작
이해림 푸드 칼럼니스트

49 독서의 문장들
신은혜『가능한 불가능』
가능성이 가득한 새해를 열어젖히고 싶다면
김혼비 에세이스트

64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애한교직, 중국과 축구의 관계
강민주 KOTRA 중국지역본부 차장

66 국제개발협력 이슈톡
격랑의 국제 기후대응 메커니즘 논의,
국제개발협력의 전략적 역할은?
황금물결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성과평가팀 전문연구원

68 당신 곁의 철학
새해, 당신의 신년 운세는 어떠십니까
허유선『인생에 한 번은 나를 위해 철학할 것』저자

69 빅데이터로 본 생활변화관측기
게임사고의 현실화, 1인분 해내다
박현영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장

70 강양구의 과학 토크
마음 챙김 명상으로 시작하는 새해
강양구 지식큐레이터







71 1달 1음반
힙합적 탁월성에 매력적인 대중성까지
배순탁 음악평론가

72 소비자 정보
프랜차이즈 치킨 1마리 열량, 1일 섭취기준보다 최대 1.5배 높아
한샘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 책임연구원

74 이달의 세계산책
동유럽의 낭만과 역사를 품은 도시, 프라하
김후영 『언젠가 한 번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저자

78 시평
서민금융 재원으로서의 휴면예금 재정의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책값이 인상되더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아울러 정기구독자에게는 1년치(12개월) 외에 추가로 2개월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0,000원
- **정기구독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행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조동철 KDI 원장
편집인 홍두선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편집주간 이용수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자료개발실장
편집위원 기획재정부 이민호 혁신정책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남석 기획재정담당관
외교부 류호권 다자경제기구과장
행정안전부 홍성철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하윤진 기획혁신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강석 홍보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백형기 기획조정담당관
환경부 조현수 녹색전환정책과장
고용노동부 홍경의 기획재정담당관
국토교통부 김배성 기획담당관
해양수산부 공두표 기획재정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기획혁신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성종원 혁신기획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선중규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임형준 정책홍보팀장
편집간사 유경숙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실 사무관
편집장 이지은
취재·편집기자 강지은, 표초희, 홍성아, 신정아
감수 이재열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ISSN 1227-8033 01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e-mail nara@kdi.re.kr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매월 말일 발행)
제34권 1호 통권386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문화 라 04859호)
기사문의 044-550-4644
제작지원·인쇄 경성문화사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월간 『나라경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지를 읽고 난 소감, 제안 등을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nara@kdi.re.kr)로 보내주세요. 우편엽서에 의견을 적어 아래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세 분을 선정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2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팀 (우) 30149

2022년 12월호 당첨자
강현숙(경기 시흥) / 임성희(경기 고양) / 최재광(경기 가평)

2023 한국경제를 위한 제언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기대됐던 세계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의 급격한 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전년보다 상황이 악화됐다.
올해는 미중 패권경쟁 심화, 중국경제 경착륙 등이 전망되며
경제위기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 한국경제도 수출 실적 악화 등으로
1%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해에 한국경제가 어떻게 대내외 난관을 극복해 낼 수 있을지
『나라경제』가 각 분야 연구원장들의 제언을 들어봤다.





기회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열린 사회

요즘 우리는 위기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40여 년 만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진단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보다 더 자극적인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도 회자된다. 여기에 더해 우리를 둘러싼 대외 환경도 그 어느 때보다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세대 및 계층 간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하는 것만으로는 작금의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갈 수 없다. 우리는 조금 냉정하고 차분하게 현재의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 높이려면 규제합리화와 노동시장 개혁 통해
민간 스스로 경쟁력 강화할 수 있어야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큰 이슈는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이다.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대규모 부양정책이 지속된 것이 그 발단이다. 수요는 급속도로 팽창하는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공급 측면이 기대만큼 받쳐주지 못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한 것이다. 이에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금융시장은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됐고, 실물경제 역시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그 심각성은 다소 약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경기회복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경제상황은 공급 측면의 생산성을 개선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요 측면만 자극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 경제상황, 생산성 향상 없는 수요 자극만으론
지속적인 성장 기대할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개인에 창의력 발현 기회 주고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해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국가가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엔 우리 경제가 이미 고도화됐다. 이제는 민간 스스로 자신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대신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창의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사회적 장애요인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개인의 개발된 능력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혀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타파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열린 사회를 만들어나갈 때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규제합리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이 경제·사회의 발전속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 정부 주도 개발정책의 레거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버', '타다' 사태와 같이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적응을 제약하는 규제, 대형 소매업 영업규제와 같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들은 민간 스스로의 창의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dccho@kdi.re.kr



이 발현될 기회를 제약할 뿐 아니라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공간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에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대신, 정치적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규제들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러한 비합리적 규제들은 노동시장에서 특히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경직적 근무시간제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고용주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기회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경직적 임금체계인 호봉제는 생산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젊은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며, 고령 근로자의 은퇴연령을 연장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아울러 경직적 고용은 아직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좋은 직장'을 찾지 못한 근로자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제2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일수록 첫 직장이 평생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수록 대학 입시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은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켜 가계의 윤택한 소비생활을 제약하는 동시에 경제력의 대물림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생산적 교육에 더 많은 복지재원 투입해
자신의 능력 개발할 기회 폭넓게 줘야

결국 모든 국민에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전반이 보다 유연해지고 적극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능력을 발휘할 기회뿐 아니라 스스로 능력을 개발할 기회 또한 보다 폭넓게 제공돼야 한다. 우선 형편이 어려운 유아 및 학생들의 생산적 교육에 복지정책 재원의 보다 많은 부분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충만함에도 재원 부족으로 사업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신생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고 폭넓게 제공될 때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공정한 기회의 제공은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해 역동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결코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장애인, 고령층과 같이 원천적으로 기회를 활용하기 어렵거나 스스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해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층을 두텁게 배려해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사회를 통합하고 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함께 잘 사는 사회'는 모두의 이상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성장을 우선할 것이냐, 분배 혹은 복지를 우선할 것이냐의 오래된 논쟁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에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효율과 분배를 동시에 가로막고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성장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함께 잘 사는 사회'에 성큼 다가선 우리 사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를 둘러싼 외부환경은 매우 불안하다. 우리는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와중에도 위기 이후 어떤 모습의 경제·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실제 우리가 외환위기 때 다시는 유사한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견뎌낸 결과, 우리의 경제체질이 극단적인 외부 충격에도 버텨낼 정도로 강화됐다. 덕분에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라던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우리 경제가 비교적 잘 이겨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위기극복 과정에서는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할까? 이번 위기가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지 않은 수요 자극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줬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 의제가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규제합리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개혁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들은 특정 이해집단의 저항을 초래할 수 있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위기를 겪을 때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드했던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우리는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에 모두의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혁신성장을 넘어 전략성장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매달리던 전 세계가 일상적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면서 만난 것은 커다란 위기를 극복한 후 가져야 하는 희망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어려움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기후위기, 인구, 저성장, 에너지, 양극화, 질병과 재난 등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았고 헤쳐나가야 할 길은 어지러웠다. 그러나 2023년을 시작하는 상황은 어려움을 넘어 고약해 보인다.

하나의 큰 시장으로 움직이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세계는 멈추고 마치 판게아가 갈라져 이동해 대양을 사이에 두고 각 대륙으로 나눠진 것과 같이 '경제판게아'가 갈라지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유불리는 모호하고 셈법은 복잡해졌다. 게다가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에너지와 식량 문제가 덮치고 인플레이션, 환율, 이자율 등 금융까지 요동치고 있다. 때가 어려워지니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많은 문제가 앞다퉈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야말로 '모든 문제' 시대다.

획기적인 고기술·고생산성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국가경쟁력 향상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뒤엉켜 만들어낸 복합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1960년대 이후 석유파동, 냉전 붕괴,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저성장 뉴노멀 등 지금까지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온 우리는 알고 있다.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본은 결국 탄탄한 국가경쟁력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국가경쟁력=인구×생산성', 즉 인구가 만들어내는 생산성을 국가경쟁력으로 볼 수 있다.

감소하는 인구는 우리나라에 정해진 미래다. 이미 2021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처음으로 감소해 2040년에 5천만 명 이하로 줄고 2070년에는 3,800만 명으로 현재의 7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전체 인구에서 15~64세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2020년 72%(약 3,700만 명)에서 2040년에 57%(약 2,800만 명), 2070년 46%(약 1,700만 명)가 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까지 늘어나는 구조적 난관이 예고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함수의 다른 변수인 '생산성'이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가지려면 생산성을 최소한 2040년에 1.8배, 2070년에 2.2배로 높여야 한다. 획기적인 고기술·고생산성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절체절명의 필수과제다.

생산성은 구조적이다.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다. 산업개발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 투입 중



고생산성 산업으로의 전환은 여성 등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편입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사진은 지난 11월 3일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스마트 미니농장에서 마을 주민들이 새싹 삼을 첫 수확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munmiock@stepi.re.kr



심의 구조를 큰 사회적 희생을 대가로 치르면서 외부의 충격을 통해 바꿨다. 생산성 변화는 기존 산업의 혁신과 고생산성 신산업의 성장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존 산업 중 제조업에서 기술 수준이 높은 부문에서 생산성 증가가 뚜렷했다.

신산업으로는 ICT산업의 성장이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실질 GDP의 ICT 비중이 2000년 1분기 4.3%에서 2018년 4분기 11.7%로 확대됐고, 특히 GDP 대비 ICT 수출은 2000년 약 3.2% 수준에서 2018년 약 18.9%에 달했다. 기존 산업과 신산업 모두 고기술 산업이 생산성 증대와 경제발전에 주는 영향을 증명했다. 이후 2010년대 중반 정체 내지 감소세를 보이던 제조업 생산성이 최근 스마트제조 정책으로 증가세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200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저부가가치 구조에 고착돼 제조업과 비교하면 상대적 생산성이 실질적인 하향세에 있다.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기존 산업 분야의 생산성 혁신을 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는 과거 ICT산업의 역할에서 볼 수 있듯 새로운 첨단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끊임없이 촉진하는 일에 달려 있다. 이러한 방향을 만드는 첫걸음은 혁신인재들이 혁신기술기업을 만들어 새로운 산업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벤처붐은 20년에 한 번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혁신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벤처붐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혁신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생산성 신산업은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인구감소, 즉 경제활동인구 감소 대응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지금의 20~30대가 2040년 경제활동의 중심축이 되는데,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 결과가 치명적일 것이다. 고생산성 신산업을 일으키는 일은 새로운 교육을 받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사회적 성장을 이루며 역량을 키울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동시에 충분하지 않은 혁신인재를 확보할 방법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벤처기업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벤처사업을 하러 오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보통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는 인재들은 역량이 훌륭하고 성취 욕구가 크다. 먼저 우리나라로 유학 온 해외 우수인재들이 공부를 마치고 바로 귀국하기보다 우리나라에서 벤처사업을 하며 투자를 받아 자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 혁신의 길을 터야 도태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고생산성 산업으로의 전환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던 인구군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편입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이 해당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일하는 시간의 양에 큰 영향을 받는다. 고생산성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해 적은 시간의 투입으로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특히 여성 일자리 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변화하는 첨단기술산업과 결합해 고질적인 저부가가치에서 전향적으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생산성 높은 좋은 일자리로 전환해 가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체질 개선은 고령인구군이 생산가능인구의 역할을 하게도 만들 것이다. 초고령화를 앞둔 우리나라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다행히 청년층·여성층·고령층 중 많은 인구가 고등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강점이다.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일은 더 이상 사회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다.

자유로운 연구개발 지원과 전략적 국가임무를 구분해 다루는 국가혁신시스템 필요

고생산성 혁신기업과 신산업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장 큰 밑거름은 과학기술 혁신이다. 눈앞에서 경제판게 아는 갈라지고 기후변화를 늦추려는 국제사회의 규범은 강력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사회 질서의 판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국가전략성을 포함한 과학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혁신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보편적 혁신의 자유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한 전략적 국가임무를 이중화해 다뤄야 한다.

혁신성장을 넘어 전략성장을 꾀해야 한다. 지난 60여 년간 응축한 위기극복과 기회로의 전환 역량을 발판 삼아 과학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혁신을 이뤄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복합위기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 한국경제, 긴 안목으로 미래 기회 잡을 내실 다져야

지금 우리는 글로벌 복합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긴 그림자가 3년째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월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올해 글로벌 식량위기와 에너지위기의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반도체와 원자재 등 전략자산뿐만 아니라 일반 범용상품의 안정적인 공급도 여전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는 가속화하고, 미중 경쟁은 비전통적 영역뿐만 아니라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도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요 강대국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도 노골화하고 있다.

대외경제 상황은 불안정 속에서 큰 조정을 겪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돼 온 확장적 통화정책은 그동안 엄청난 과잉유동성을 발생시켰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급망 불안으로 물가 수준이 빠르게 상승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은 경기를 빠르게 하강시켜 취약국을 중심으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줘 분배구조를 악화시켰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은 허약해졌고 사람들은 지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면서 식량·에너지 위기 더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어

현재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 먼저, 올해 세계경제는 2% 초반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치는 2021년 6.1%, 2022년의 3.1%(추정)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2010년대 중반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 3% 중반대를 밑도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긴축과 파편화 속에서 코로나 이후 진행되던 경기회복이 다시 억눌린 형국이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친 악영향뿐만 아니라 40년 만에 돌아온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주요 선진국이 펴고 있는 급격한 긴축적 통화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급망 교란은 2021년 말에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원자재와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압박이 계속되고 있으나 운송과 생산 부문에서는 공급망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 2021년 말 최고 수준에 비하면 최근의 공급망 압력은 반으로 낮아진 상황이다. 다만 전쟁으로 빠른 정상화가 늦춰진 측면이 여전히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초 예상과 달리 1년 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수세로 몰리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지만 러시아의 경제상황이 심각하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러시아에 대한 전쟁 의지가 여전하다. 종전협상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이다.

올해 세계는 식량위기가 더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다. 지난해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제약받았으나 협약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지속됐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의 파종면적이 줄어듦에 따라 상당한 생산감축이 예상된다. 게다가 러시아산 비료 공급의 부족으로, 남미 등 다른 곡창지대에서의 비료 부족 문제가 적정 수준의 식량 공급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심각한 것은 천연가스 공급이다. 지난해 전쟁자금 확보 차원에서 제한적이나마 천연가스를 공급했던 러시아는 대체 공급지를 찾게 됨에 따라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재개할 이유가 별로 없어졌다. 비축 천연가스가 바닥날 유럽의 2023년은 2022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hckim@kiep.go.kr



첨단 전략자산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구조는 계속 유지되고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겪는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며, 적절한 소재와 장비 공급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또는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의 생산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핵심광물 부문에서 중국의 장악력이 확고한 가운데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을 무기화하지는 않았으나, 올해는 공급망상의 교란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남아공과 남미 일부 국가의 대체 가능성이 아직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EU는 각각 반도체, 배터리와 전기차 분야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해 연이은 입법을 통해 대중 견제를 넘어서 자국으로 모든 첨단산업의 공정을 불러들이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는 유럽, 일본과 우리나라의 반발을 사고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유럽도 첨단 전략자산에서 '포트리스 유럽(Fortress Europe)'을 구축한다는 우려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지난 12월 22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 그 뒤로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펠로시 하원의장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선물한 우크라이나 국기를 펼쳐 들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서도 대전환의 구조변동이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 제정은 WTO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독립적인 디지털동반자협정과 함께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른 12개국과 함께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미국이 자신의 의도를 솔직하게 드러낸 협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디지털 무역규범이 제정됐는지 파악해야 한다.

노동과 환경 이슈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선행 협정을 진지하게 참고해야 한다. 그린 분야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제적 이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최근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2021년에 발표한 당초 안보다 더 나아간 새로운 CBAM을 발표했다. 전환기간이 올해 10월 시작되고 본격 시행은 그로부터 3~4년 뒤로 일정이 다소 늦춰졌지만, 대상 품목에 수소가 추가되고 일부 간접배출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명분은 어떠하든지 CBAM은 탄소관세의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통상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 등 해외동향 정밀하게 파악하고
규제개혁 통해 속도감 있게 디지털·그린 전환 이뤄내야

한국경제가 이 상황을 견뎌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글로벌 복합위기의 거센 파도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보다는 이를 타고 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해외동향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국내적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속도감 있게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디지털과 저탄소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벗어나기 위한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보다 긴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2, 3년 후면 위기 국면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기업은 향후 도래할 기회를 잡기 위해 내실을 다져 신제품 개발과 상용화 작업을 미리 하는 하로동선(夏爐冬扇)의 지혜를 가져야 하고, 정부는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선별적 재정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

다시 찾아온 위기, 산업 대전환으로 극복하자

탄소집약, 높은 중국 의존도 등
기존 산업 질서에 최적화됐던 우리나라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그간 우리가 가졌던
경쟁우위의 많은 부분이 리스크로 전환돼
어느 국가보다 산업 대전환에 적극 대응할 필요

지난해 경제상황은 우리가 내심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불확실한 측면이 많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 주도한 통화정책의 급속한 전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연이은 봉쇄조치, 격렬해지는 강대국들의 경제패권 다툼, 점증하는 신흥국들의 금융불안과 같은 변수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 결과 2022년 경제는 전년보다 악화됐고 기대했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3년 경제에 대한 기대도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IMF는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7%로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상당수 국가가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는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성장세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불확실성 확대 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등 성장 시장 공략하며 중국 의존도 낮추는 등
경기침체기의 수출 전략 마련해 안정적 성장 모색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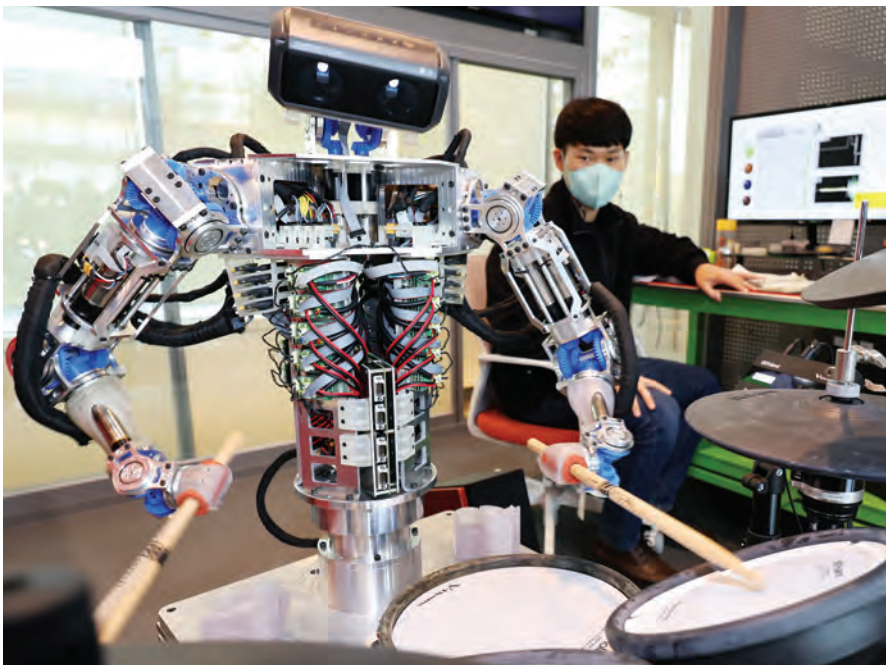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의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 4분기부터 제조업과 수출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고물가와 고금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붙잡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소비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1% 후반대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제조업에서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의 업종은 그나마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되지만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을 비롯한 여타 대다수 업종은 부정적 흐름이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미칠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는 각 부문의 누적된 부채와 금리의 추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위험요인이 될 것이다.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적으로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회사채시장 불안과 자금시장 경색이 일부 나타난 바 있는데, 기업 도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물가 및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의 유지가 필요하지만,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경기침체기의 수출 전략을 마련해 안정적인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수출의 획기적 증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이끌어왔지만 올해는 수출이 감소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등 성장하는 시장을 집중 공략하면서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 산업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당면한 위기극복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되, 세계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메가트렌드를 간과해서는

주현
산업연구원장
juhyeon@kiet.re.kr



지난 11월 11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된 AI·로봇연구소 오픈랩 행사에서 지능로봇연구단이 드럼 연주 로봇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안 된다. 우리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신기술과 신산업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감축의 중요성이 커지는 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소위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 소비 행태와 노동 및 일자리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 기업들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은 우리만 직면한 문제는 아니다.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주어진 과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기존의 산업 질서, 즉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친환경적이 아닌 탄소집약적, 그리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하에 최적화된 국가 중 하나였다. 지금은 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간 우리가 가졌던 경쟁우위의 많은 부분이 오히려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어느 국가보다 산업 대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의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기술 개발이나 신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이 미흡하고, 강대국 간의 갈등과 국제질서 변화로 경제안보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더욱이 저성장·양극화와 함께 인구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인한 성장잠재력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산업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은 현재 갖고 있는 초격차를 유지·확대해야 한다. 이들 산업에 민간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산업인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 대전환 위해선 민간의 신속·과감한 투자 가능하게 하고 제품·서비스 간 융합 촉진해 새로운 먹거리 산업 찾아야

둘째,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주력산업은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적 해법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연관 산업 생태계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 전환 과정에서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경쟁력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새로운 먹거리 산업도 찾아야 한다. 순차적이고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육성정책은 동시다발적이고 와해적으로 이뤄지는 혁신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유망기술을 선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품과 서비스 간의 결합과 융합을 촉진하는 데 좀 더 공을 들여야 한다.

정책당국은 긴 안목으로 대응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 개별 사안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폭넓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그래야만 충분한 추진력과 일관성을 갖고 장기간에 걸쳐 산업 대전환 전략을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룰 수 없는 노동개혁, 국민 눈높이에 맞춰 중장기까지 대비

2022년 고용통계를 살펴보면 우리 노동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고용회복 추세가 나타난 2021년 2분기부터 2022년 11월까지 3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2021년 초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실업률은 2022년 매 분기 떨어져 3분기엔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2.5%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3분기 53만 명 감소하는 등 2022년 감소 폭이 더욱 커지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으로의 이행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노동시장 모니터링 강화하고, 위기 징후 포착되면
고용 유지·촉진과 소득 유지 위한 단계별 정책 추진해야

그러나 2023년 노동시장 분위기는 어둡다. 최근 글로벌 고물가와 이에 대응하는 고금리 정책은 경제를 둔화시키고 있으며, 국가 간 전쟁과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국제 공급망 마비 또한 악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는 어느새 우리 경제를 옥죄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 12월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 내수, 수출 등에서 경기둔화의 징후를 지적한다. 11월 기준 7개월 연속 경기둔화, 9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 1%대 중후반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금융위기 상황이던 2009년 0.8%, 코로나 상황이던 2020년 -0.7%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KDI와 한국노동연구원은 2023년 8만~9만 명의 연간 취업자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1월 기준 63만 명의 취업자 증가 규모를 고려할 때, 이는 2023년 급격한 고용 악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한다.

실물경제 상황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올해는 일자리 대책과 소득 유지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2023년 초 노동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기 징후가 발생하면 고용 유지 및 촉진, 소득 유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전단계로 과거 추진된 일자리대책 중 효과가 큰 사업을 미리 선별해 두고, 1단계로 임시직·일용직 등이 급감하거나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앞서 준비해 둔 대책을 추진한다. 2단계로 일부 분야의 상시직 일자리 감소까지 발생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가 0에 가까워지는 경우 1단계 대책에 상시직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는 분야의 충격요인을 완화하는 산업정책과 함께 일자리전환 촉진 지원대책을 추가한다. 마지막 3단계로, 대부분 분야 모든 고용형태에서 일자리가 감소해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가 감소 추세로 전환할 경우 1단계, 2단계 정책에 더해 경기사이클을 상승 주기로 바꾸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혹자는 경기침체가 오는 이런 시기에 무슨 노동개혁을 추진하느냐고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중장기에 걸쳐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구축하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미뤄뒀다가 추진할 성격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내용이며, 이 개혁을 추진할 경우 국민이 어떤 성과의 혜택을 받을지가 명확히 보인다면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공약집을 통해 다양한 노동 이슈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밝혔다. 이 공약들은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제시를 거쳐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큰 정책과제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6월 이정식 고용노동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stkim@kli.re.kr



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여기서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이 노동개혁 과제 중 가장 먼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근로시간 법제의 현대화를 위해 근로시간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임금체계는 격차 해소, 공정성 회복을 위한 개편을 제시했다.

세부 과제를 보면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서는 노사의 연장근로시간 자율 선택, 근로일 및 출퇴근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한 근로자의 건강보호,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체계 강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및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근로시간 제도의 현대화 등을 제시했다. 임금체계 개편에서는 고령자 시대를 대비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제 정비, 중소기업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지역·업종 차원의 임금체계 개편,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 방지, '상생형 임금위원회' 설치,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언급됐다.

과거 부작용 타산지석 삼고
부문별 파급효과 등 세밀하게 분석해 개혁 추진할 필요

2023년은 이러한 세부 과제를 더욱 구체화해 그 내용을 만들고 추진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가 주 52시간 상한제를 추진하면서 이 제도가 적용되면 큰 충격을 받는 근로시간 비례형 저소득 근로자를 고려하지 못한 점,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워 특례에 포함돼 있던 부문(일례로 연구개발)을 주 52시간 상한제에 포함한 점,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설정하지 않고 임기 내에 마무리지으려 했던 점 등의 부작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즉 이번 제안대로 연장근로를 자율적으로 노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장시간 근로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부문 또는 직업이 없는지 그 파급효과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 또한 기업 직무별·업종별 등 특성이 다양한 만큼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임금체계, 공정한 평가에 따른 임금체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풍부한 정보가 제공됐을 때 연구회가 제시한 내용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다.

변동성이 커진 경제와 사회의 대전환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부처 간 협력을 통한 패키지 정책 추진이 필수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국정을 이끌어가는 두 리더로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여러 부처의 협력 이끌어내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발생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2023년은 노동시장 위기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만들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시에 중장기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해 추진하는 시작점에서 세밀한 정책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고용노동 분야의 장기적 정책 이슈는 결국 기술에 의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나 고용·노동 정책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고용·노동 정책-경제·산업 정책-과학기술정책-교육·훈련 정책의 공조가 필요하다. 수년 동안 정부는 일자리정책에서 부처 간 협력하기보다 상호 견제해 정책패키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변동성이 커진 경제와 사회의 대전환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한 패키지 정책 추진이 필수다. 그 중심에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국정을 이끌어가는 두 리더로서 공동의 목표를 갖고 경제와 사회 분야에 속한 여러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2023년은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 눈높이 맞춤형' 정책 추진이다.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우리 국민의 후생 향상이므로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된 목표와 내용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위한 굳건한 토대 마련을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서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기조가 천명된 이후 역대 정부 대부분이 수용한 중요한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에서 이 용어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난 이후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에서도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은 기본이 됐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창조경제'를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와 복지, 고용의 선순환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물론 정부마다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에 담은 정책의지와 비중, 무엇보다 구체적인 정책고리들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의 정치적 수사(rhetoric)로 끝난 경우도 없지 않다.



돌봄과 교육, 건강 부문에서 국민의 수요에 걸맞은 서비스가 공급되는 기반을 만든다면 새로운 일자리와 유효수요 창출 등 상당한 효과가 유발될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1월 대전 서구 둔산초 예비소집일에 신입생들이 서로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복지·경제의 선순환에 대한 이론적 논쟁 있지만
역사적으로 복지 확대가 성장과 동조한 사례 많아

한국 사회에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이 등장한 근본적인 배경에는,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고도 경제성장 시대에 일관되게 관철돼 온 '선성장 후분배' 논리에서 벗어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복지에 정책적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동원한 '복지정당성'의 논리가 있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복지도 확대하게 되면 이들이 서로 교호(交互)작용을 해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이 논리는 정치권 차원에서 외면하기엔 너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술적 차원에서는 이 논리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특히 복지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다시 경제의 성장이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지는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논쟁의 소재임이 틀림없다.

복지의 확대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조세부담으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며, 시장의 착란요인을 증대해 국가경제적으로 재정여력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결국 경제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통적 주류경제학의 논리다.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의 확대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고, 유효수요의 확대정책이며, 민간일자리 축소를 대신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서 유효할 뿐 아니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lts1115@kihasa.re.kr



라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한 자동안정화 장치의 기능도 있다고 주장한다. '제3의 길' 등장 이후 2000년대에는 사회적 투자라는 말로 함축해 복지의 사회적·경제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했다.

실재 세계에서는 워낙 시공간의 스펙트럼이 커 한 가지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복지국가가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 기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일쇼크까지의 전 세계적인 황금성장기,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부터 2007~2008년 금융위기까지, 그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시기가 크게 네 단계로 나뉘는데 각 시기마다 특징이 다를 수밖에 없다.

피터 린더트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2004년 출간한 저서 『공공의 성장(Growing Public)』에서, 18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실로 100년이 넘는 장대한 기간 동안 주요 선진국의 사회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온 추이와 경제와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복지국가 정책이 1인당 GDP에 악영향을 주지 않은 국가의 경우 조세와 복지급여의 설계가 성장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세 민주주의와 보편주의가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은행이나 OECD는 불평등의 축소, 빈곤층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성장을 이끈다고 결론 내리며 선진국에 재정확장 정책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유럽대학연구소의 안톤 헤머릭 정치사회학 교수와 로빈 위그노 노엘 박사후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공동저서 『회복력 있는 EU 복지국가(Resilient Welfare State in the European Union)』에서 과거 금융위기 당시 과감한 재정정책을 쓰지 못해 불평등이 양산됐다는 자성이 코로나19 위기 때 서구 국가들이 유례없는 재정투여를 감행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역사적으로 그리고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복지의 확대가 성장과 동조한 경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은 매우 중요한 정책기조임이 분명하다. 2022년 7월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생산적 맞춤복지'를 제시하면서 "복지지출은 인적 투자로서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방식이 돼야 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어 7월에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주요 분야별 재정투자 방향에서 '복지투자 혁신 및 지출 효율화를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전략'을 언명하고, 복지투자 혁신, 성장 친화적 복지전략,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새로운 복지수요 적극 대응, 지출구조 개혁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산성·혁신역량 높이는 방향으로 전 계층에 복지투자, 사회통합 통해 갈등비용 줄여 성장동력 만들어낼 것

사회서비스 부문을 주목하고 돌봄과 교육, 건강 부문에서 국민의 필요와 욕구에 걸맞은 양의 서비스가 양질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제대로 만들기만 해도 새로운 일자리와 그로 인한 유효수요 창출, GDP 증대 등 상당한 효과가 유발될 것임은 자명하다. 다만 이 일자리들이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가 되지 않아야 매우 훌륭한 선순환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양육과 부양이라는 돌봄부담을 줄여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용률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10~20%p 높일 수 있는 엄청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다. 초고령화 추이 속에서 고령층이 지금과 같은 저소득에 머물지 않고 노인 친화적 직종에서 적정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선순환의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생산성을 제고하고 혁신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 계층에게 '복지투자'를 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성과를 전 국민이 골고루 향유하는 사회통합의 길임과 동시에 갈등비용을 줄여 성장동력을 낳는 길이기도 하다.

린더트 교수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도덕적 해이와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리에 의거해 빈곤층 지원을 경계하는 '로빈 후드의 역설(paradox of Robin Hood)'을 언급하며 그러한 역설이 빈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국가에선 오히려 재정투여가 적고 그렇지 않은 선진국에선 더 많은 '기이한' 현상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는, '약자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선순환의 주요한 고리 중 하나로 작동할 것을 기대해 본다. 새 정부 5년 동안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 역량 결집이 시급

세계경제는 여전히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종식되지 않고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 위드 코로나가 불가피한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를 상황이다.

세계적인 식량 및 에너지 위기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 개선 지연 등에 대한 우려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각국의 강력한 통화긴축에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유럽경제는 위기로 내몰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긴축발작(선진국의 긴축으로 신흥국의 통화·주가 약세가 발생하는 현상) 등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도 큰데, 중국경제마저 경착륙하게 되면 글로벌 경제위기의 재현은 불가피해진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새로운 군비경쟁으로,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 30년 전쟁 후 양국 모두 패망의 길을 걸은 상황과 같은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에 미국과 중국이 빠지면, 세계는 경제뿐 아니라 안전보장 측면에서도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는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 전쟁, 인플레이션, 미중 패권경쟁 등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 세계경제 전체로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선진국과 개도국 중 일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중첩된 위기 속 방향성 잃어가는 한국경제,
저성장·고물가 함께 나타나는 슬로플레이션 지속될 전망

국내 경제는 중첩된 위기로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대외 여건도 문제지만, 대내적으로도 현실화할 경우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각종 리스크 탓에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이미 1%대 중후반대로 낮아진 상황으로 그나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분간 산적한 대외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둔화세가 장기화되는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 상황은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리스크도 매우 큰 상황이다. 국내 건설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중소 금융사 및 중소·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금 조달 환경 역시 녹록지 않다. 특히 가계를 중심으로 한 민생 부문은 3고 현상과 함께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시장 불안정, 가계부채 부실화, 실질임금 상승세 둔화 등으로 실질소득이 크게 낮아지면서 생활고가 가중되는 이른바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이 지속될 것이다.

당연히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적인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지속돼야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통화 및 금융 정책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재정정책도 이러한 딜레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 정도면 다행이라는 안도감으로 위안을 삼아서도 안 되고, 1%대로 떨어질 위기에 놓인 잠재성장률을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극복을 위한 잠재력과 국가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리더십 발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ysh5679@hri.co.kr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위기의식에 따른 자기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극복 리더십을 제대로 작동시킴으로써 정부 및 공공 부문의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정부 및 공공 부문과 민간이 원팀이 돼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정부와 공공 부문은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정책 의사결정과 실행 및 관리에 철저해야 하고, 민간 부문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긴요하다.



지난 12월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갈등관리 역시 매우 중대한 과제로, 실패하면 위기극복은 커녕 국가 역량 결집조차 불가능해진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극화의 확대와 산업재해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갈등관리 능력이 반드시 발휘돼야 한다.

공공은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정책 실행·관리가, 민간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이 긴요

국내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직간접적인 시장개입 등 비전통적인 방법을 포함한 모든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정책 조합(policy mix)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여건의 안정화 기반이 마련되면 위기극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장 기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놀라운 아시아(amazing Asia)'로 칭송받는 동아시아 지역은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면서 급성장하고 있고, 중동 등 주요 산유국들은 막대한 오일머니로 산업화와 도시화 및 탈전통에너지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기회는 밝아 보인다.

국내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엔
모든 가용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매우 중요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정책 조합으로 대응해 나가야

산업과 기술 측면에서도 충분한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각국의 탄소제로 전략,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은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과 기술, 시장 확대를 촉진할 것이 분명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좋고 지구환경에도 좋은 소비(good for me & the planet)' 트렌드 정착에도 기여해 막대한 시장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시돼 온 것처럼 규제 혁신,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의 세대교체, 노동의 유연성 확보, 인적자본의 고도화 등은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임과 동시에 단기적으로도 위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는 점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시: 2022년 12월 19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 장관 집무실(세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 콜로라도대 경제학 박사
2011.06.~2013.03.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2016.10.~2018.09.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2018.10.~2021.07.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2022.03.~2022.05.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2022.05.~2022.10.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2.10.~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예산은 재정건전성 저해하는 지출 아닌 ‘미래성장 뒷받침’하는 투자”

계묘년 첫 인터뷰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어떠신지요.

지난 10월 5일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노라 약속드렸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 추세 속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삶은 더 어려워집니다. 새해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들을 사각지대 없이 먼저 찾아내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충실히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연금 개혁을 준비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해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을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취임 후 약 3개월 동안 가장 주력했던 부문은 무엇인지요?

장관 취임 전 지난 5월 10일 제1차관으로 취임한 이후 줄곧 힘든 상황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약자복지’ 정책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대책’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은 제1차관 때부터 직접 부내 TF를 운영하면서 꼼꼼히 검토하고 챙겼던 사안입니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이를 위한 기반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국민들께 설명했으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보건복지 부문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제도의 성숙으로 사회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재정여력은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보건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성장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예산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니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미래성장을 뒷받침’하는 투자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보건의료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습니다. 민간의 기술·자원 활용, 규제혁신 등으로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미래 재정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체계를 만들고 복지예산이 누수되거나 보조금을 위법·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간혹 생계 불안으로 인한 가족동반 죽음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사전에 발굴하고 제때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위기가구를 정확히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정보를 기존 34종에서 채무, 질병 정보 등을 포함한 44종으로 확대하고, 위기정보 분석은 개인 단위에서 ‘세대 단위’로, 위기정보 입수 주기는 2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하는 등 분석의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 분야 중심의 발굴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집배원, 의료사회복지사, 민간 자원봉사단 ‘좋은이웃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함께 지역 민관협력 발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편배달이나 병원비 수납 과정



등에서 데이터로 파악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기가구를 신속히 파악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 통신사가 보유한 위기가구 연락처 정보를 연계하고, 연락이 두절된 위기가구 구조를 위해 비상시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협조로 거주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발굴한 위기가구를 두텁게 지원하도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 인상하고, 실거주지에서도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적 복지정책 대상에서 소외돼 온 고독사 위험군, 취약청년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발표하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요.

이번 기본계획은 보육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마련했습니다. '보육·양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4개 전략과 16대 주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종합적 가정양육 지원방안을 포함했습니다. 부모급여를 도입해 새해엔 만 0세 70만 원, 만 1세 35만 원, 2024년에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을 지급하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부모·교직원이 어린이집 평가에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해 자율적인 품질 향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과제 방식 도입 검토 등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고도화하고,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해 매뉴얼 마련, 상담 확대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을 구축합니다.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보육취약지역을 선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인건비·수당 등을 집중 지원하며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인 약자복지의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약자복지'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최약자층부터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를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소득·돌봄 지원을 통해 생계 불안과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돌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빅데이터 활용 및 기관 간 정보 연계 강화 등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자복지 구현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겠다 하셨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텐데, 이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노후에 직결되는 제도로, 연금개혁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합니다. 이번 연금개혁은 정부안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의 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신뢰에 기반한 소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5차 재정계산에서 논의되는 회의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전문가 포럼 운영 실황을 생중계하고 있으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백지광고 진행, 청년 및 주요 이해관계 집단 등 세밀화한 대상별 의견수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4조에는 재정 전망과 보험료 조정,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5차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보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며,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논의결과와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내용 등을 반영해 준비할 계획입니다.

필수의료 확대로 의료복지를 향상하며 의료진 지지도 얻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 사례가 있을지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료진이 부족한 기피 분야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의 의료복지 향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전문 분야별 간담회, 의료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응급 분야, 인구감소 등으로 적정 공급이 어려운 분만·소아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바탕으로, 응급의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순환교대 당직제 등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공공정책수가 도입으로 야간·휴일 응급수술 등 중증응급에 집중적인 보상 강화, 교육·수련 및 의대 정원 증원 등을 통한 충분한 의료인 확보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대책 이후에도 중증·희귀 난치질환, 중증응급 정신질환, 재건성형 같이 의료인력이 희소한 분야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전략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가 백신·치료제 개발 및 생산 등 바이오헬스산업 역량이 국민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의약품 무역수지가 최초로 흑자로 전환되고, 체외진단기기 수출액이 전년 대비 약 600%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약·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해외진출, 코로나19 백신개발 사례와 같은 공익적 목적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빅데이터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전략 개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약자복지 구현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나 보건의료 분야 육성에 데이터 활용과 규제 등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에 대한 준비상황은 어떤가요?

보건의료데이터는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인 만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의 안전성 담보가 필수적입니다. 현행 법령은 「의료법」 등 의료현장 적용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법」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데이터 활용기관 지정, 의료기관 등에 보안체계 의무 부여, 위반 시 처벌·퇴출 구조 마련 같은 데이터 안전관리체계를 전제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 생태계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불명확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관님의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국민들에게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와 면역력 감소 등 감염 확산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절기 2가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최대 2.6배 높은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추가접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접종간격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고위험군 청소년 보호를 위해 2가백신 접종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 추가접종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과 건강취약계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와 이용자는 추가접종을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정부도 방역과 의료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준비해 이번 겨울철 재유행을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은 『나라경제』 편집장

이 슈

진격의 생활물류서비스 시대

수영 수업에 갔더니 선생님이 모레까지 오리발을 가져오란다,
"오늘 밤에 주문하면 내일 오후에 올 거예요"라는 말과 함께.
예전에는 택배 받는 것보다 오프라인 매장을 가는 게 더 빨랐는데
요즘은 어플 하나로 '새벽배송'이나 '내일도착 보장'이 된다.

이 편리함에 힘입어
2021년 생활물류 분야 매출은 전년 대비 27.6% 급증했고,
같은 해 경제활동인구 1인당 택배 이용횟수는 128.4회에 달했다.
실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활물류서비스,
얼마나 '진격의' 성장을 하고 있는지 『나라경제』가 알아봤다.

플랫폼·데이터 등에 업고 매출 일으키는 풀필먼트로 진화 중

최근 물류업계의 트렌드이자 키워드인 풀필먼트(fulfillment)는 '이커머스 물류'라고 해석해도 의미가 통한다. 물류센터 상품 입고부터 택배 등 라스트마일 물류업체 출고까지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물류프로세스 효율화에 매진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원가 경쟁력 증대와 출고량으로 대표되는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최근의 풀필먼트는 물류를 넘어선 서비스를 아우르고 있다. 물류업이 제공하는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이종서비스가 결합되며 부수적인 것이 됐다. 국내 이커머스시장 투 톱인 쿠팡과 네이버가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쿠팡은 2020년 풀필먼트서비스 '로켓제휴(현재 로켓그로스)'를 시작했다. 그간 쿠팡이 매입해 직접 유통하는 자사 상품을 처리하는 데만 활용했던 물류망과 시스템을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제3자 판매자에게까지 개방했다. 제3자 판매자는 로켓그로스에 입점해 쿠팡의 물류를 빌려 쓰고 수수료를 지불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쿠팡의 풀필먼트도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여타 물류업체의 그것과 동일해 보인다. 하지만 쿠팡이 풀필먼트에서 강조하는 지점은 '매출 증대'다. 쿠팡 입점 영업 담당자에 따르면 로켓그로스 입점으로 클릭수가 일반 쿠팡 마켓플레이스 입점 대비 648% 상승하고, 매출은 평균 3배에서 많게는 12배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고객 전방의 막강한 트래픽, 즉 충성고객으로 대표되는 로켓와우 멤버십 회원 900만 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빠른 배송과 무제한 반품에 매료돼 멤버십에 가입한 이들은 '로켓배송 필터'로 선별된 제품을 구매한다. 일반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제3자 판매자는 이 '필터'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쿠팡의 핵심고객에 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는 더 높은 매출 증대를 위해 로켓그로스에 입점하고 30%대의 높은 수수료와 재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다.

한편 네이버도 쿠팡의 문법을 적극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2021년 풀필먼트플랫폼을 시작했지만 CJ대한통운, 두핸즈, 파스토 등과 같은 업체의 물류서비스 견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정도에 그쳤다.

네이버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에 '내일도착'이라는 필터를 추가해 오늘 자정까지 주문하면 내일 도착이 가능한 CJ대한통운의 이커머스 물류서비스를 연결했다. 쿠팡의 로켓배송 필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이 필터는 빠른 배송을 기대하는 소비자의 트래픽을 증대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서 네이버는 지난 12월 'N도착보장'이라는 솔루션을 출시했다. 단순히 검색 필터만 추가됐던 내일도착과 다르게 도착예정일까지 상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네이버가 책임지고 소비자에게 일정 부분을 보상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나아가 도착보장 솔루션을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수요예측 솔루션을 통해 판매량 예측 및 분석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수요예측뿐만 아니라 물류데이터를 활용한 더 많은 D2C(Direct to Customer) 솔루션 라인업을 강화해 판매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쿠팡과 네이버가 만든 풀필먼트서비스는 물류를 바탕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풀필먼트를 강조한다. 고객 전방의 거대한 노출 권력을 갖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에 가능한, 물류만 운영하는 물류업체는 만들기 어려운 문법이다. 게다가 네이버는 풀필먼트서비스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최적화 솔루션을 녹여냈다. 고객 전방의 수요데이터, 나아가 물류 흐름까지 파악하는 기술 역량을 가진 업체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들은 물류로 돈을 벌지 않는다. 솔루션 사용에 따른 수수료로 돈을 번다.

최근의 풀필먼트는 고객 전방 노출을 활용한 마케팅과 데이터를 통해 상품 조달을 최적화하는 형태로, 물류센터를 넘어선 종합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풀필먼트는 이커머스 물류지만 이커머스 물류가 아니다. 이는 저단가 경쟁이라는 숙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서비스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해 애를 먹는 물류기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참고할 방향이기도 하다.



엄지용
비욘드엑스 대표
connect@beyondx.ai

물류센터 택배 작업, 이제 로봇이 한다고?



파스토의 오토스토어는 제품이 담긴 빈(bin)을 수직으로 쌓은 후 로봇이 움직이며 빈을 피킹하는 장비로, 적재율을 극대화하고 오출고를 방지할 수 있다. ©파스토

코로나19는 지난 3년간 산업의 많은 부분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특히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유통산업의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온라인 커머스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리오프닝, 원자재가 상승, 금리인상 등 복합적인 이슈들로 온라인 커머스의 성장세가 주춤했으나, 국내 유통산업에서 온라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온라인 커머스 주문을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인 '물류'는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일례로 실제 출고작업이 이뤄지는 물류센터 내 인력 공급난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물류시장에서 주요 이슈로 대두됐다.

지난 11월 방문했던 북미의 대형 할인점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물류센터를 정규직 위주로 운영했으나 현재는 일용 근로자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이 비중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었다.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물류센터에서 겪는 인력난이 단순히 온라인 수요가 늘어나고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노동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 세대는 노동강도가 센 물류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자유롭고 임금은 높은 업종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물류센터들이 효율적인 운영과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위해 중소형 규모에서 점차 대형화되고 있고, 주거지 인근에는 지을 수 없어 점차 외곽으로 이동하다 보니 인력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인력 수급을 위해 통근차량 운영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다수의 물류업체가 단기인력 투입으로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단기인력은 작업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생산성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당일출고,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시장에서 원하는 물류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숙련되지 못한 단기인력은 오출고, 파손, 분실 등 휴먼에러(human error)를 발생시키고, 이는 당장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했던 물류업체의 사업을 오히려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온오프라인 유통 공룡들이 앞다퉈 물류인프라에 투자하고, 물류 전 과정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커머스의 급격한 성장은 온오프라인 유통사들에 더 많은 주문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송하기 위한 물류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촉매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장환경 속에서 파스토는 자체 인공지능(AI) 기술과 물류인프라 구축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형 온라인 판매자들이 물류에 신경 쓰지 않고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는 풀필먼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동화된 물류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있는데 2021년 8월에 문을 연 용인1센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대한민국 1호 스마트물류센터 1등급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8월에 오픈한 용인2센터 역시 스마트물류센터 1등급 인증을 획득하며 자체 AI 기술 역량에 자동화 설비, 로봇 등의 인프라를 접목하고 있다. 특히 용인2센터의 경우 최근 LG전자와 1년간의 테스트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피킹(picking)용 자율주행 로봇을 대량 도입했으며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풀필먼트서비스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추세다. 파스토는 24시 출고마감, 새벽배송, 해외배송, 쇼핑몰 연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네이버와 '도착보장서비스'도 론칭했다. 이러한 작업을 사람에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과 운영방식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 물류업계에 새로운 기술과 자동화 장비의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다.



홍종욱
파스토 대표
hello@fassto.com

택배, 유통, 배달…일상이 된 생활물류서비스

빠르고 편하지만 개인정보 노출 등 우려도 있어

전통물류와 생활물류 비교

전통물류(산업·수출입 물류)		생활물류
제조업 등 산업 수출입 지원	목적	국민 생활편의 증진
화주기업(B2B)	고객	소비자(B2C), 자영업자 등
중대형·대량 소빈도 화물	품목	소형·소량 다빈도 화물
중대형 화물차	운송수단	소형 화물차, 이륜차, 드론 등
노동력 기반	기술	IoT, AI, 빅데이터 기반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1.



'물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택배
58.2%



유통
18.4%



무역(수출입)
10.2%



화물차운송
4.2%



보관·창고
2.6%

•••



음식배달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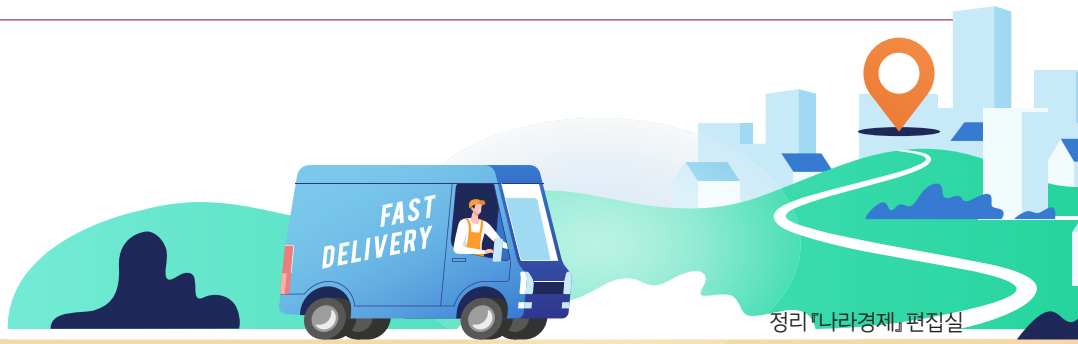


항공화물 운송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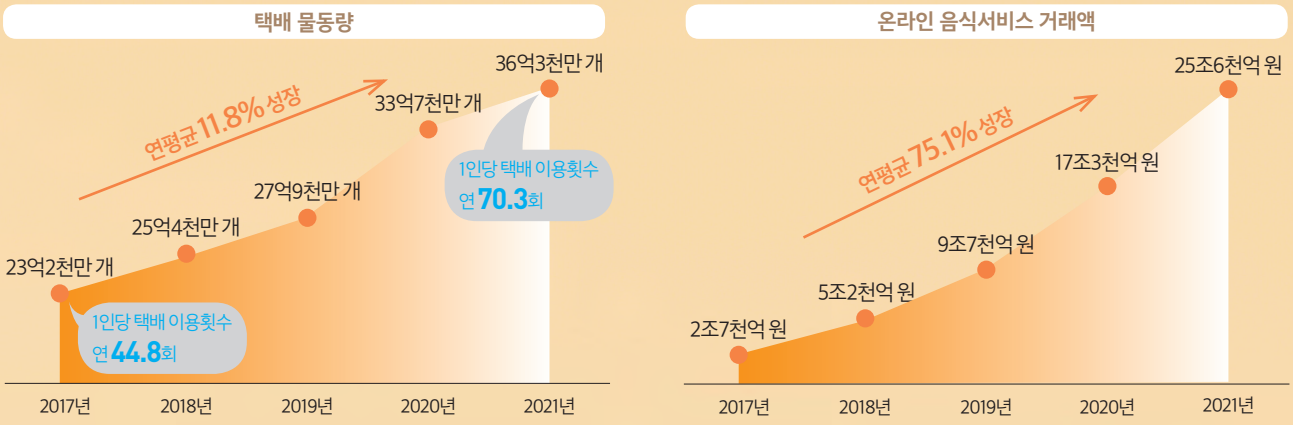
온라인쇼핑
0.4%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생활물류산업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물류산업 대국민 인식조사', 2021.



정리 | 나라경제 편집실

택배 물동량 및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추이



자료: 한국통합물류협회, '2021년 택배산업 실적 발표',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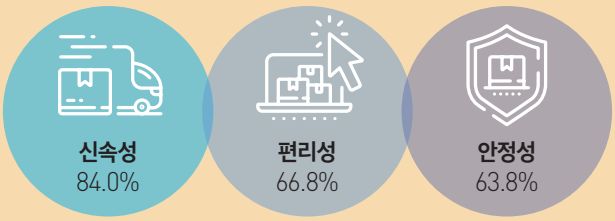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온라인쇼핑동향조사(판매매체별)', 2022.

"물류서비스,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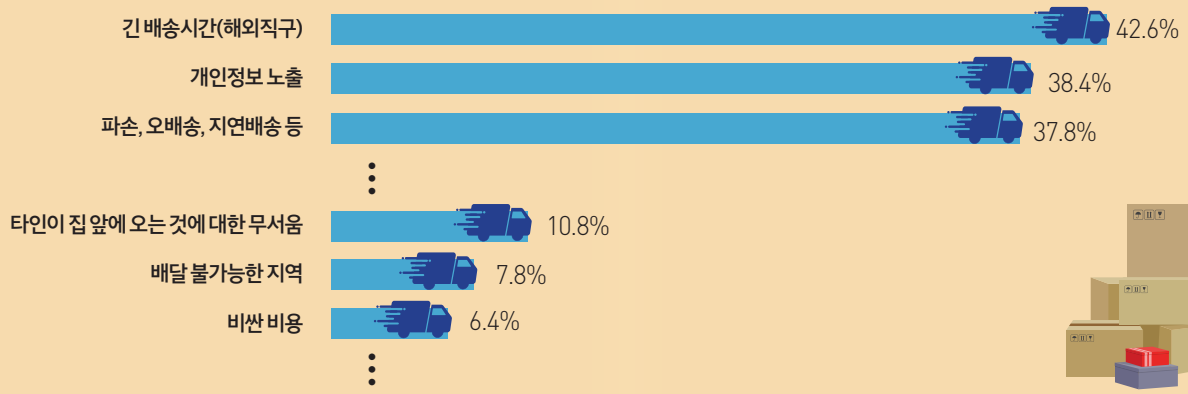


71.2%

물류서비스의 좋은 점 TOP 3



물류서비스의 불편한 점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생활물류산업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물류산업 대국민 인식조사', 2021.

“라스트마일시장의 문제에서 시작된 배달로봇 개발… B2C·B2B 플랫폼도 개발할 것”

강기혁 뉴빌리티 부대표

점심에 주문한 음식 배달료는 5천 원, 배달시간은 50분 남짓. 좀 더 저렴하고 빨리 받을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에서 출발해 자율주행 로봇 ‘뉴비(NEUBIE)’를 개발한 스타트업 뉴빌리티. 강기혁 부대표에게 이들이 만들고 있는 배달서비스 혁신에 대해 들어봤다. 머지않아 뉴비가 우리 동네를 누비며 배달하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모두 A-T-T-E-N-T-I-O-N 어텐션~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을 시작한 계기는?

2017년 이상민 대표가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뉴빌리티를 창업해 여러 아이템에 도전한 끝에 2019년부터 자율주행 로봇 기술·서비스 개발에 매진하게 됐다. ‘어떤 기술을 만들지?’보다는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의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생각하며 시장을 살피던 중 물류 분야, 특히 라스트마일시장에 눈길이 갔다. “배달로봇이 등장한 지는 꽤 됐는데 왜 여전히 일상에서 보기 어려울까?”, “급증하는 배달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높아지는 배달료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고,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배달로봇이 답이라고 생각해 뛰어들게 됐다.



강기혁 뉴빌리티 부대표

배달로봇 분야에서 기술뿐 아니라 ‘가격’도 혁신이 필요하다 본 건가?

물류비용 중 53%가 라스트마일에 집중돼 있고, 그중 80%가량이 인건비다. 이 비용을 기업과 소비자가 나눠 부담한다. 한편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배달서비스는 주문한 상품이 안전하고 빠르게, 또 저렴하게 배달되는 것이다. 소비자 대상으로 배달수수료 가격 수용선을 조사해 보니 1,500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더라. 현재 배달서비스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또 우리는 배달로봇이 아직 시장에서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가 ‘가격’에 있다고 봤다. 로봇 한 대 가격이 수천만~수억 원대여서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크다. 그래서 시중 가격의 4분의 1 수준으로 제작했고, 월 렌탈서비스 형식이나 건당 수수료 모델 설계 등을 구상하고 있다.

그럼 실제로 실내외 주행을 할 수 있나.

아파트, 대학, 편의점, 골프장 등에서 다양한 배달시나리오를 축적하며 도심주행 경험 데이터를 쌓아 자율주행 성능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있다. 첫 서비스 실증은 2021년 인천 송도였다. 당시 협력했던 치킨회사 앱을 통해 로봇배달을 선택 옵션으로 넣어 2개월간 인근 아파트단지와 연세대 국제캠퍼스로 배달했다. 첫 4주 동안은 기존 배달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후로는 로봇배달 주문량이 기존 배달보다 많아졌다. 배달료를 받지 않는 대신 동 입구까지만 배달했는데도 불편을 감수하고 로봇배달을 체험해 보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얻었다.

기존 배달시스템과의 차별점은? 안전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편의점과 협력해 실증서비스를 운영했을 때 보통 30~40분 내 배달을 완료했다. 기존 배달의 경우 배차를 받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 근거리 배달에 40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배달서비스 구간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하는 건 아니다. 로봇에 맡길 때 더 높은 효율이 나타나는 구간에 집중하려는 것이다. 한편 자율주행 로봇이 보행로로 주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 문제를 고려해 소형·경량·저속 이동체로 개발했다. 최대 시속 약 7km로 보행자와 유사한 속도에서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동적·정적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 또는 정지하도록 구현했다. 우리가 활용하는 기술은 비주얼 슬램으로, 카메라와 센서를 사용해 위치를 추정하고 3차원 지도를 생성하기 때문에 GPS가 먹통인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

다. 최근에는 한 보험사와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배달서비스 전용 보험상품 출시에 관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그럼에도 아직은 인간의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상품의 적재와 수령은 점원과 고객이 해야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일 등은 인간 개입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기술이 개발돼 있다. 실증사업 때 하루는 갑작스러운 공사로 길이 막히자, 뉴비의 AI가 관제사 지시 없이 스스로 상황을 인지해 대안 경로를 찾아 배달을 완료한 적이 있다.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제도적 환경이나 사회적 수용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로봇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은 로봇배달서비스를 많이 접할수록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부지런히 기술·서비스 개발을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규제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여러 규제가 얽혀 있다. 우선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차마(車馬)'로 분류돼 보행로를 이용하려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한시적 예외조치가 필요하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원 내 30kg 이상의 동력장치가 통행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뉴비처럼 카메라를 이용해 영상정보를 취득하며 자율주행을 구현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역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

해외 상황은 어떤가.

지난해 5월 해외 진출을 위해 시장 조사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미 그곳은 상용화가 충분히 돼 있었다. 20개 이상의 주에 배달로봇이 운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 있었다. 게다가 미국은 제도 도입 시점이 2016년이니, 우리는 기술·서비스 격차뿐 아니라 제도 격차라는 핸디캡을 갖고 시작하는 셈이다. 일본도 자율배송 로봇에 해당되는 '원격조작형 소형차'의 규격·최고속도 기준 등이 포함된 규정과 레벨4 자율주행 운행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이 올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 중이어서 앞으로 국내 제도환경도 좋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보행로를 주행하고 있는 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 ©뉴빌리티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규제개선은?

우선 현재 발의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가 담겨 법적 지위가 생기게 된다. 일종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운행안전인증체계도 담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 운행의 디딤돌이 돼줄 것이다. 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도 생길 예정이라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는 기업에는 몹시 반가운 일이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실외이동 로봇의 보행로 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자율주행 로봇서비스 상용화 원년이 더 앞당겨질 것이라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뉴빌리티가 그리는 미래는?

SF영화에만 존재했던 로봇을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확장·발전해 나가려 한다. 현재는 아파트, 대학, 병원 등 사유지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형 서비스 모델에 집중하고 있다. 라스트마일 배달시장에 착안한 도심 내 배달서비스를 포함해 골프장, 리조트 같은 레저형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모듈도 지속해서 확장할 것이다. 로봇 기술개발 외에도 '뉴비고'라는 B2C·B2B용 플랫폼을 개발해 주문 접수·처리, 배차·경로 관리, 모니터링 제어, 고객 인증 등 배송 시작부터 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려 한다. 현재 플랫폼 연동을 최우선 목표로 다양한 파트너사와 플랫폼 사업화를 위해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물리적 공간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생활 속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응원해 주면 좋겠다.

신정아 『나라경제』 기자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육성 위해 기업 규제혁신, 근로여건 개선 등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교역량 감소와 경기침체로 물류업계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물류산업은 온라인 주문수요 급증에 따른 비대면 물류서비스의 활성화로 '생활물류'라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면서 비대면경제 시대를 선도할 '8대 유망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성장의 계기를 맞이했다.

택배 물동량은 2017년 23억2천만 박스에서 2021년 36억3천만 박스로 연평균 11.8% 증가했으며, 온라인 음식거래 규모는 2017년 2조7천억 원에서 2021년 25조7천억 원으로 연평균 75.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사태' 이후 급감했던 국내 물류산업 매출액도 회복세에 접어들었으며 고용 증가와 새싹기업 창업 활성화 등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 중 온라인 음식거래 규모는 연평균 75.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12일 서울 시내의 한 배민라이더스센터 앞에 세워져 있는 배달용 스쿠터들. ©연합뉴스

글로벌 물류수요 급증 속에 인프라 확충, 인력난 해소 등 과제도 산적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택배·배달 시장도 성장세다. 택배시장은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9.8% 성장이, 배달시장도 2028년까지 연평균 10.8% 성장이 전망된다.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생활물류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다양한 생활물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물류혁신계획 2030'을 발표해 라스트마일 드론 활용, 농촌지역 서비스 혁신 등 생활물류서비스 최적화 방안을 마련했고 일본은 '종합물류시책대강(2021~2025년)'에서 비대면 물류서비스 활성화, 인력 친화적 물류 실현, 택배택시 전면 허용 등을 발표했다. 특히 중국은 '택배업발전 14.5 규획'과 '콜드체인 발전 14.5 규획'을 발표해 스마트·친환경 물류설비 구축과 선진 택배서비스 체계 확립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프랑스는 '국가 자전거 물류계획(2021년)'을 통해 화물자전거를 이용한 라스트마일 계획을 발표했다.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혁신과 인프라 확충, 친환경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국의 공통된 특징이다.

국내외 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사업주체가 각각의 전략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첫 번째 주체 유형으로는 아마존, 알리바바, 쿠팡 등이 있다. 이들은 유통사업을 기반으로 물류서비스를 확장해 나간다. 두 번째로 DHL, CJ대한통운 등 물류전문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빠른 배송서비스 욕구와 수요에 대응한다. 세 번째로 우버이츠, 바로고, 배달의 민족 등 퀵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륜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이용해 틈새시장인 음식 등 소화물 배송시장에서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막대한 투자와 더불어 인력난 해결과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막대한 투자 지출과 과도한 경쟁으로 기업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문제점도 양산되고 있다. 높은 규제장벽으로 다양한 운송수단 활용과 창업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도심 내 높은 지가와 주민 반대, 입지규제 등으로 생활물류시설이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 배송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됐다. 배송거리 증가로 도심 교통체증이 발생함에 따른 높은 사회적·환경적 비용도 문제로 꼽힌다. 배달서비스 증가로 인한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지역주민과의 갈등 심화,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종사자 산재 증가, 인력난 등도 문제다. 농어촌 등 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추가운임, 오배송으로 인한 불편 등 서비스 품질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물류 종사자 쉼터 설치하고,
영업점-종사자 간 불공정 계약 감독 강화

이에 정부는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제정해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지난 11월에는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규제 혁신, 생활물류산업 첨단화 촉진, 지속 가능한 생활물류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최고의 서비스 환경 구축' 등 5대 전략을 세우고 전략별 주요 정책을 수립해 생활물류서비스를 둘러싼 현안 및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전략의 주요 추진정책으로는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동배송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배송수단 보급 촉진을 위한 구매 보조금 지급 등 정부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한다.

둘째, '생활물류산업 첨단화 촉진' 전략에서는 도심 자율주행 기반 로봇배송 시스템 및 인공지능(AI) 기반 운용기술 개발과 도시철도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운송시스템 및 도심 공동물류센터 구축기술 개발, 공공물류빅데이터 사업 추진 등을 시행한다.

셋째, '지속 가능한 생활물류인프라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 및 다양한 택지개발 사업자가 사업계획 단계부터 생활물류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마이크로 풀필먼트 등 생활물류시설의 도심 내 입주를 위한 「건축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제 개선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영주차장·공원 등의 유휴공간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택배 집배송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의 'PUDO(Pick-Up & Drop-Off) 구역'처럼 화물의 상하차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 도로구역 지정을 제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배달대행 종사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소화물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며 생활물류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쉼터 설치와 운영요건 등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 간 불공정 계약 및 행위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사업자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최고의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택배 운송장 등에 기재되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만들고, 도서 지역 택배비 현황, 문 앞 배송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택배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자 한다. 농어촌, 산간 등 생활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택시, 버스 등과 연계한 공유형 택배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넣었다.

생활물류서비스가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산업구조가 서비스 중심 경제로 재편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법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중장기 발전방향과 전략별 세부 과제로 시설 부족, 규제장벽, 지원수단 미흡 등 산재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기업에는 원활한 신산업 진입과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두가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입지규제 개선과 유휴부지 활용한 집배송시설 확보 등으로 도심 내 생활물류인프라 확충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물류 운송수단에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 포함하고, 농어촌 및 산간 지역에 공유형 택배서비스 추진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myjoo@koti.re.kr

외산 기술에서 벗어나 R&D 투자 확대하고 물류 분야 설비·장비 표준화 추진해야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매년 10~20%씩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최근에는 이커머스시장이 확대하면서 택배를 비롯한 생활물류산업이 물류산업의 중심축으로 등장했다.



국내 생활물류산업 중에서 택배산업은 2013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연평균 12.2%의 물동량 증가가 있었고, 배달업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8.3%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성장은 코로나19로 더욱 가속화됐고, 성장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물류산업의 성장으로 물류센터 및 주문배송센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물류서비스 수준 향상 및 비용 감축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의 도입과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면서 친환경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생활물류인프라 확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물류산업은 이커머스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다품종 소량 물류와 라스트마일 배송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풀필먼트센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도심형 풀필먼트센터인 '마이크로(micro) 풀필먼트센터'로 발전, 확산되고 있다.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는 소비자 근처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장점으로 신속한 배송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인프라 공급이 부족하며,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공동집배송센터 등 생활물류 관련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입주제한 규제 완화와 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생활물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풀필먼트센터 및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운영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배송 단계까지 자율주행, 드론, 창고로봇, 인공지능(AI) 그리고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한 물류 분야 설비·장비, 시설 등의 기술 수준은 최고국 대비 약 80%이며, 외산 기술을 활용·응용한 것에 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류 설비·장비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공동화·디지털화·자동화를 위한 설비 및 장비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로봇, 드론 등 물류 핵심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송수단 운영 관련 규제 합리화와 안전규격 제정 등을 추진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라스트마일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라스트마일서비스 체계 구축은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택배용 경유차 사용을 줄이고 전기 화물차 및 이륜차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배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급과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 등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한편 신선물류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온도 유지를 위해 과다하게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 문제와 포장폐기물 처리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 스마트 물류용기 개발과 운영·관리 기술 개선, 냉동·냉장 차량을 위한 고효율 냉동기 및 고단열 적재함 등의 개발이 필요하며, 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장
hkha@inha.ac.kr

연중기획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우리

지방에 산다는 것

합계출산율 0.7명대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그런데 수도권 인구 비율은 50%대.
일자리, 인구 등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고, 상당수 지방은 소멸 위기에 있다.
지방에 대한,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나라경제』는 올 한 해 로컬의 목소리를 통해,
로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우리'를 향한 대안을 찾아볼 계획이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지방에 산다는 것'.
지금 우리 지방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지방에 사는 이웃의 이야기, 그리고 생태계적 관점에서
로컬을 바라보는 마음에 대해 들어봤다.



이제는 지방시대 열어젖힐 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우리의 메가트렌드가 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소산다사(少産多死)의 산물이다. 2019년까지 출생이 사망을 앞서다가 2020년부터 역전됐다. 2021년 5만7천여 명인 자연 감소 폭은 앞으로 더 커진다. 지방소멸은 소산다사와 청년 인구의 도시 유출이 불렀다. 경상북도 한가운데 의성군을 보자. 1992년 10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가 지금은 반토막이다. 출생이 200명대, 사망이 800~900명대로 고착하고 젊은이의 이촌향도(離村向都)가 멈추지 않으면서다. 2019년 의성군 금성여상의 폐교 졸업식 당시 92세 학교발전위원장이 취학생 부족을 두고 '운명적 대세'라고 울먹이던 장면이 생생하다. 전국의 농산어촌은 의성군과 오십보백보다. 지방소멸의 끝은 수도권 극점(極點) 사회다. 하지만 수도권 패권은 반석이 아니다. 수도권도 늙고 있고, 결국은 인구도 준다. 소산다사의 진군을 막을 마지노선은 없다.

활기 없는 인구동태, 지방소멸과 수도권 일극의 일그러진 국토는 한국 사회의 근본모순이다. 두 사안은 착착 진행돼 온 과학의 영역이지만 국난으로 치달은 한국 현대사 최대의 정책 실패다. 두 과제는 지금 피로현상과 비관주의에 휩싸여 있다. 우리는 자식과 손자 세대에 지속 가능한 국가의 틀을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 인구동태의 세계 속 좌표축과 수도권 패권, 지방소멸의 현주소를 면밀히 살펴보자.

지속 가능한 국가의 틀 물려줄 수 있을까

인구동태는 전형적 소산다사형인 일본보다 암울해진다. 유엔의 '세계인구 전망 2022'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화율 추계치(이하 중위 기준)는 2022년 7월 현재 일본이 29.9%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우리는 17.5%로 주요 7개국(G7)과 견주면 미국(17.1%)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하지만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46년 고령화율이 37.3%로 일본(36.9%)을 제친다. 2052년엔 40%를 돌파하고, 2081년(47.5%)에야 정점을 찍는다. 일본은 40%를 넘지 않는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수인 노년



지난 12월 1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산한 이면도로. 행인이 많지 않아 간밤에 내린 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부양비는 어떨까. 우리는 2022년 24.6명으로 G7과 견주면 가장 낮다. 일본은 51.2명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2048년 우리는 72.5명으로 일본(72.0명)을 웃돈다. 우리나라는 2100년까지 선진국·신흥국 가운데 유일하게 노년부양비가 100명을 넘는다. 2066년 100.5명을 기록하고, 2082년(108.5명)에야 천장을 친다. 일본은 2082년 78.8명으로 가장 높다. 우리의 장래추계 인구는 2062년 4천만 명을, 2084년 3천만 명을 밑돌고 2094년에 반토막(2,596만 명)이 된다. 일본은 2056년 1억 명 이하(9,954만 명)로 떨어지고, 2100년 7,364만 명이다. 일본의 장기 목표는 2060년 인구 1억 명 확보다. 추계치를 보면 선전하고 있다. 인구의 무한 감소가 옵션일 순 없다.

여기에 우리는 인구가 수도권에 쏠려 있다. 국토 전체 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1960년 20.8%였으나 30년 만인 1990년(42.8%) 두 배로 늘었고, 2020년(50.1%) 절반을 돌파했다. 일본의 수도권 4개 광역단체 인구 비중(29%)과 비교가 안 된다. 도쿄권에 오사카권(4개 광역단체, 14%)·나고야권(3개 광역단체, 9%)의 3대 도시권을 합친 비중(52%)이 우리와 같다. 가공할 집중이다. 산업·교육·의료·문화 인프라도 한가지다. 집중이 집중을 불렀다. 경제력 편중은 더하다. 지난 12월 현재 상장사의 73%(1,865개사)가 수도권에 소재한다. 시가총액 기준으론 86%(1,873조 원)다.

수도권은 사람과 각종 인프라가 언덕을 구르는 눈덩이 격이라면 지방은 햇볕 든 처마 밑 고드름 꼴이다. 읍·면은 고령자 중심의 한계마을 연합체에 가깝다. 한계마을은 점(點)에서 선(線)으로, 면(面)으로 퍼지고 있다.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소멸위험지수를 보자. 2022년 3월 현재 지수가 0.5 미만인 소멸위험 기초단체는 전체의 절반인 113곳이다. 대부분의 군 지역이 해당한다. 이 중 지수가 0.2 미만인 소멸고위험 지역이 45곳이다. 수도권은 중심, 지방은 주변과 다름없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동전의 양면…
국민이 공감하는 확고한 비전 마련이 첫 단추

복합골절의 처방은 간단치 않다. 동과 서의 역사적 경험을 참고삼아 우리식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신의 한 수는 없다. 첫째는 인구감소와 균형발전 정책을 다루는 제도적 틀이다. 관건은 입법이다. 스웨덴이 19세기 말부터 반세기에 걸친 출생률 추락의 대반전을 이뤄낸 데는 초당파 인구위원회의 백년대계 정책이 결정적이었다. 정당, 관련 사회단체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위의 정책 보고서가 입법의 모태가 됐다. 아이는 국가가 낳아 기른다는 프랑스의 가족정책 형성과정도 유사하다. 인구감소와 균형발전 문제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다. 정부와 관련 위원회, 국회가 머리를 맞대는 틀이 불가결하다. 새로운 형식은 여론을 환기하고 내용을 지배한다.

소산다사와 청년 인구의 도시 유출이 부른 지방소멸의 끝은 수도권 극점 사회, 하지만 수도권도 늙고 인구도 줄어드는데…

전략과 정책의 새로운 방향은 다극집중, 지방에 매력적인 거점도시 조성하고 복지·의료·상업 시설 등 인프라 압축해야

둘째는 내용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동전의 양면이다. 여기에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겹쳐 있다. 지금은 부처별 칸막이 정책이 숱하다. 그래선 정책 간 조화 속 승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 비전과 로드맵 마련이 첫 단추가 아닐까 싶다. 비전이 확고하면 전략을 짜기도, 정책 수단을 구사하기도 쉽다.

전략과 정책의 새로운 방향은 '다극집중'의 네 글자가 돼야 한다. '다극'은 헌법상 책무인 균형발전을 상징한다. 지방에 반짝반짝 빛나는 매력적인 거점도시를 더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인구의 댐이 형성된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은 지방보다 출생률이 더 낮은 만큼 젊은이가 역류하면 출생률은 지금보다 올라간다. '집중'은 거점도시는 물론 중소도시도 인프라를 압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구축소의 시대에 주거 지역과 복지·의료·상업 시설 등 인프라가 흩어져 있으면 유지가 어렵다. 몸집이 줄면 옷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 다극집중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로 가는 필요조건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다극집중에 4차 산업혁명을 더한 21세기판 국토 대개조로 지속가능한 한국시대를 열어보자.



오영환
중앙일보 지역전문기자 겸 대구지사장
oh.younghwan@joong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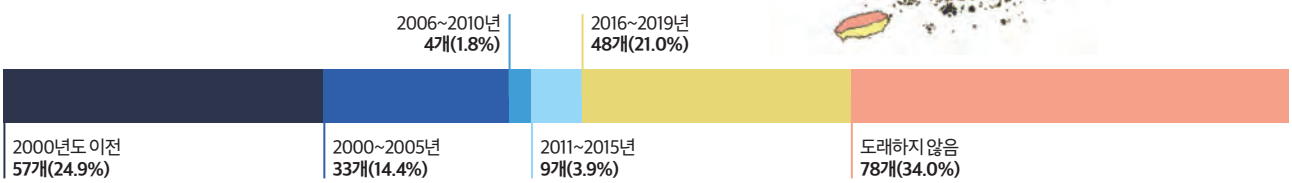
확대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지방 인구감소 요인으로 '일자리 부족' 꼽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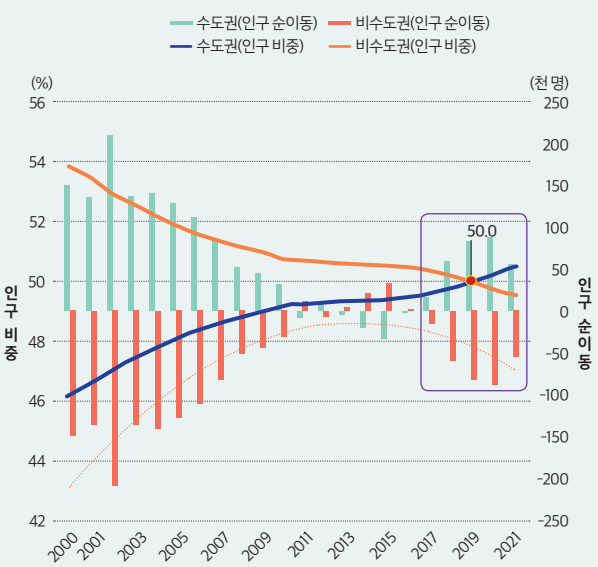
전국 기초지자체(총 229개)의 인구 데드크로스* 진입 시점 연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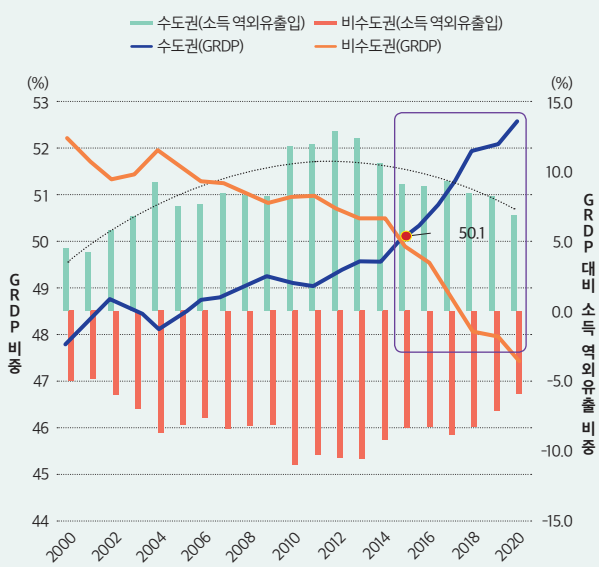
*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



자료: 국토연구원, '지방소멸 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 2022.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요 경제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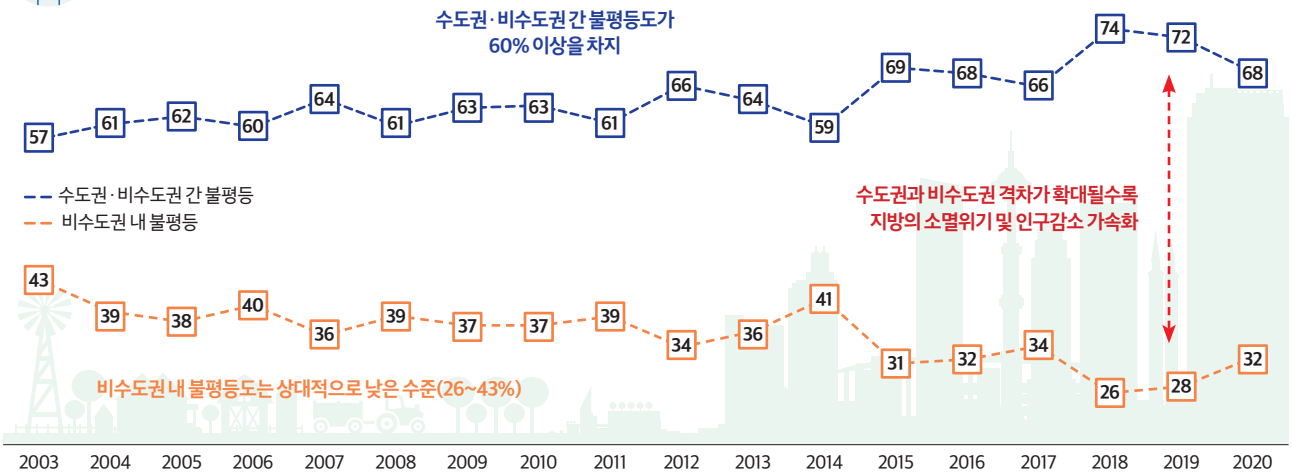




주: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 지역소득,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작성.
자료: 산업연구원,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와 정책 과제', 2022.

지역 간 균형발전 불평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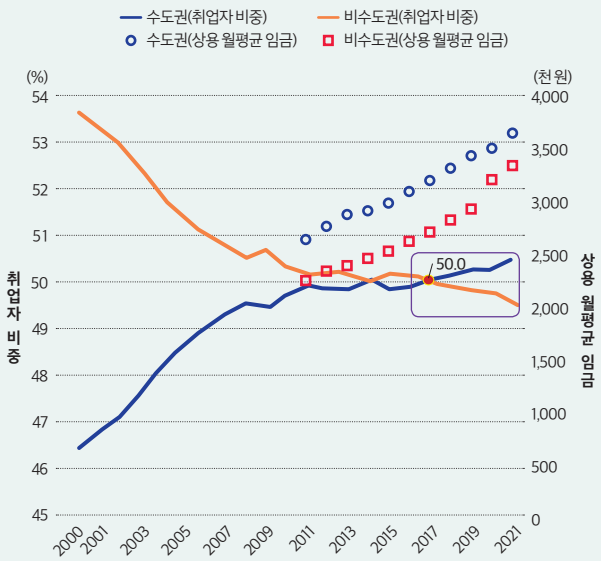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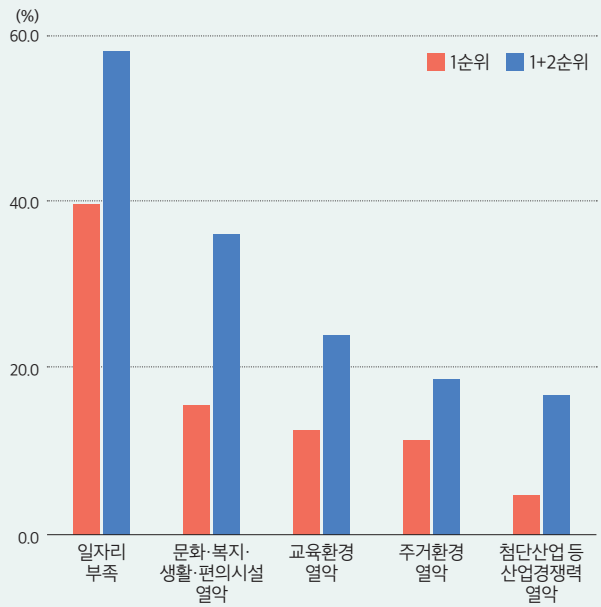
주: 산업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된 균형발전 정의에 기반해 ①지역 간 발전의 기회 균등, ②자립적 발전역량 증진, ③삶의 질 향상, ④지속가능 발전 도모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해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27개 지표 기반의 균형발전 불평등도를 측정.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방소멸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2022.

일자리·임금



지역민이 인식하는 인구감소 이유(상위 5개)



주: 인구감소지역 거주 응답자 308명 기준 통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방소멸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2022.



전남 순천만 습지 ©필자 제공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부분의 역량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에 사는 사람이 자주 느끼는 감정은 소외감이다. 인구분포만 봐도 그렇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똘똘 뭉쳐 사는데, 나머지 절반은 지방에 뿔뿔이 흩어져 산다.

일상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순간은 지상파 방송을 볼 때다. 방송에서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남에서 홍대까지의 거리'라거나 '여의도 면적의 몇 배'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강남에서 홍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여의도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온다. 서울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듣고 있으면 어쩐지 서울 사람들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잠시 내 소개를 하자면, 나는 전라남도 순천에 살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서울 인구는 약 944만 명인 반면 순천 인구는 약 28만 명이다. 서울에 비해 인구가 적으니 없는 것도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적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의료시설이다. 지방에는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도 떨어진다.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면 걱정스러운 일이다. 의료시설이 부족하면 의료서비스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시골로 갈수록 병원이 있기라도 하면 다행인 상황이다. 시골에서 응급 사고가 나면 그야말로 응급 상황이 된다.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려면 인근 광역시까지는 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 사람들은 문화생활에도 목이 마르다. 지방에서는 공연이나 전시를 볼 기회가 적다.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을 기준으로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은 380개나 되지만 전라도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은 17개에 불과하다. 서울 사람들은 보고 싶은 공연이나 전시를 취향대로 골라 볼 수 있지만, 지방 사람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에 사는 사람이 자주 느끼는 감정은 소외감이다. 지상파 방송에서 '강남에서 홍대까지의 거리' 같은 서울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듣고 있으면 어쩐지 서울 사람들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기분이다.

얼마 전 서울을 환상의 도시쯤으로 생각하는 나에게 서울에 사는 친구가 서울살이의 고충을 잔뜩 털어놨다. 그는 서울을 회색 도시라고 표현했다. 혼잡하고 탁하고 시끄러운 도시. 문화시설을 즐길 미술관, 박물관은 넘치지만 어딜 가든 길게 늘어선 줄의 끄트머리에서부터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곳. 편리함을 위해 거미줄보다 촘촘하게 서울 구석구석을 연결한 지하철도 지옥철이 되고 마는 곳. 그의 말을 들으며 지방살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장단점은 있다. 혼잡하더라도 편리하게 살 것인가, 불편하더라도 여유롭게 살 것인가. 문명의 혜택을 누릴 것인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결국, 서울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에 살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며 살면 될 일이다.



김채원
순천연향초 교사
chocopie0216@gmail.com

『나라경제』 독자에게 듣는 지방에 살아보니…

『나라경제』는 지난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지방에 산다는 것'을 주제로 다양한 경험담을 들었다. 이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김*석 충남 서천

우리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는 다방들이 있습니다. 새벽을 여는 어부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커피와 깨죽, 계란프라이 등을 새벽부터 오전 이른 시간까지만 제공하죠. 우리 마을을 지켜온 분들의 건강한 삶의 현장이고 소통의 공간이 된 충남 서천군 장항읍의 다방 이야기입니다~

윤*람 부산광역시

서울 친구들은 제가 사는 집 문만 열면 앞이 바다인 줄 압니다. 부산 사람도 바다를 보려면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회를 먹는 줄 알아요. 저희도 회는 비싸서 자주는 못 먹는데 말이죠. 아직도 지방이라면 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호 충북 음성

시골에서는 평소에 타는 버스 외에는 어떤 버스가 있는지 잘 모르고 버스 노선도 찾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른 버스를 타야 할 일이 있어 버스 기사님께 노선을 여쭤봤더니 차를 아예 정류장에 세우고 잠시 시동을 끄시더니 노선표를 보여주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는 다시 시동을 켜고 출발하셨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시골의 인심과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일화였습니다.

어*선 충남 논산

지방에, 그것도 시골에 살면, 기프티콘을 쓸 곳이 많지 않습니다. 어제는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을 사용하러 집에서 1시간 거리의 매장에 방문했습니다. 매장이 없는 경우엔 아예 사용하지도 못해요. 기프티콘을 보낼 때 우리 동네에 있는지 한 번만 검색해 줬으면….

라*경 경북 예천

지방은 젊은 사람이 귀해서 40대 중반도 새댁소리를 듣는 젊은 세대에 속합니다. 도전의 기회가 많으니 대도시에서 치이며 사는 것보다 여유 있는 지방에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단, 자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해요. 차가 막히는 일은 거의 없어서 운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문*민 울산광역시

울산에 지하철 없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뭐 타고 다니냐고요? 저희 고래 타고 다닙니다!

스펙 쌓기? 대부분의 공모전, 대회를 수도권에서 하더라고요. 2박 3일로 진행하는 대회도 많은데, 집이 수도권인 참가자들은 대중교통 타고 집 갔다가 편하게 밥 먹고 씻고 자고 오시지만, 저는 그냥 밤새고 꼬질꼬질한 상태로 대회 끝날 때까지 있었네요.



신*리 광주광역시

11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교육적인 부분, 특히 영어에서 격차가 많아요. 서울은 수업시간에 수준별로 영어회화 수업을 한다는데 광주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게 아이에게 격차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문제의 핵심은 '쏠림', 국토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자

1950년대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1970년대 대한민국의 간절한 꿈은 둘, 수출 100억 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1천 달러였다. 1980년대 초 그 꿈을 마침내 이뤘고, 15년 뒤인 199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내달려 2만, 3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행복도는 거의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도 버거워하는 청년들. 한 해 100만 명씩이던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로 줄었고, 합계출산율은 0.8에도 못 미쳐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꼽히고 있다.

선진국인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그 원인을 바로 개발시대에서 찾았다. 속도를 강조하고 빠른 성과와 효율만 중시했던 '개발병' 탓이다. 생명체가 자랄 때 필요한 시간이 있을진대 너무 빨리 성장해서 앓게 된 '성장통'이다. '민주'도 '자치'도 '분권'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채 덜컥 선진국이 돼버린 후유증이다.

만병의 근원, 수도권 과반인구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는 개발시대를 살아왔다. 개발시대를 이끈 박정희 정부는 '빨리빨리'를 외치며 속도를 강조했다. 그 시대를 관통했던 전략은 '성장거점 개발론'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토를 골고루 균형 있게 키우는 대신, 성장의 거점을 집중적으로 키우자는 전략이었다.

성장의 거점으로 대기업을 육성했고, 대도시를 키웠다. 대기업이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키우고, 자영업자들도 상생할 수 있게 경제발전의 주축이 되라는 뜻이었을 거다. 대도시를 키운 것도 성과와 효율 때문이었다. 1950년대 중반 157만 명이던 서울 인구는 15년 뒤인 1970년 500만 명을 넘어섰고, 다시 20년 뒤인 1990년에는 1천만 명을 돌파했다. 서울과 부산이 거대도시로 성장했고, 두 도시를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뚫렸다. 국가의 재정투자는 자연스럽게 경부 축에 집중됐다.

성장거점 개발은 빛나는 성취를 거뒀다. 단기간에 경제발전과 도시화를 이뤘고 선진국으로 도약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빛나는 성취 뒤에 깊은 그늘도 드리웠다. 대기업은 잘나가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힘든 세월을 각자도생하듯 살아내고 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들은 블랙홀처럼 사람과 활력을 빼앗아 가고,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시골마을들은 사람도 에너지도 다 내주고 소멸 위기를 앞두고 있다.

1975년 당시 수도권에는 전 국민의 31.5%가 살았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데, 3분의 1에 못 미치는 인구가 살았던 수도권에 2019년 기준 절반 이상의 국민이 살고 있다. 1970년대 당시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인구 5만 명 이상이었고 조금 큰 도시들은 10만 명을 보유했는데, 현재는 기초지자체 3분의 1이 5만 명 미만이다.

마을과 도시를, 지역과 국토를 생명체로 보자.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 몸처럼 바라보자.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인가? 머리에 해당하는 수도권은 피가 너무 쏠려 터지기 직전인데, 손끝과 발끝은 피가 돌지 않아 괴사 직전 아닌가? 소멸을 앞둔 농산어촌 시골마을과 지방 소도시를 생명체로 생각한다면, 아니 내 몸의 일부로 본다면 어찌할 것인가? 피가 돌지 않아 괴사하면 잘라낼 것인가? 왼발 오른발 자르고, 왼팔 오른팔까지 자르고도 내 몸은 지속 가능할까?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려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구석구석 골고루 피가 돌게 해야 한다. 수도권으로 더는 인구가 쏠리지 않게,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행복하게 일하

며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 국가재정을 이제 비수도권에 돌려야 한다.

국토 균형발전에 가장 의지가 강했던 노무현 정부도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수도 이전의 꿈은 좌절됐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아주 잘한 정책이었지만 혁신도시라는 이름의 신도시를 건설해 이전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텅텅 비어 있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이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구감소 시대와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개발은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새로 일을 벌일 게 아니라 빈 곳을 고치고 채우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림> 필자가 제안한 전북 BRT 구상안



자료: 서울시립대 JeromeLab(커뮤니티와 도시설계 연구실)

유일한 해법 '일백탈수 지역민국'

내 몸 어딘가 아프면 그곳의 증후만 볼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보고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치유해야 한다. 대한민국 병의 근본 원인은 쏠림이다. 편중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이대로 가면 양쪽 다 공멸이다. 피가 돌고 기가 통해야 건강하듯 한쪽으로 쏠리던 인구 흐름을 멈추고 되돌려야 한다.

지난 2021년 연구년을 맞아 지역살이를 했다. 하동, 목포, 전주, 강릉 네 곳에서 한달살이를 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많은 사람을 만났다. 지역살이의 결론은 '일백탈수 지역민국' 운동이었다.

"일 년에 100만 명씩 탈수도권 해서 지역에 우리가 꿈꾸는 민국을 만들자." 이것이 내가 찾은 유일한 해법이다. 탈수도권의 인구 이동은 크게 세 흐름이다. 로컬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탈수도권은 이미 시작됐다. 가장 기대하는 것은 베이비부머들이 고향으로 또는 로컬 어디로든 옮겨가 '우아한 조연'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여생을 사는 것이다. 더 좋은 교육환경을 로컬에서 찾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주에도 기대를 건다.

수도권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주인인 나라, '지역민국'을 만들자. 대한민국은 시민이 주인인 지역민국의 합이어야 한다.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단 하나의 해법은 로컬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는 살 집이고, 둘째는 자가용 없이도 편리하게 오가게 해주는 대중교통이다. 로컬에서 한달살이, 반년살이, 일년살이를 할 수 있게 머물 곳을 준비해 사람을 초대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보행만으로도 어디든 오갈 수 있게 '대자보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자.

전주 한달살이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전북의 문제 역시 대중교통이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사통팔달 연결해 주는 '전북 BRT'를 도청에 제안했고, 도의회의 초대를 받아 도의원들에게 설명했다. 덩치를 키운 '메가시티'보다 '소도시연합'이 더 좋은 해법이다. 가까운 시군들이 서로 인구 뺏기 경쟁을 할 게 아니라 원활한 연결을 통해 상생을 꾀해야 한다. 연결이 불편하면 각자도생의 제로섬 게임이지만, 14개 시군이 연결된다면 전라북도는 하나의 생활권이 돼 상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멋진 나라이고 우리는 뛰어난 국민이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매우 후진적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쟁만 시키는 '미친 교육'과 부동산 문제, 그리고 빤히 눈앞에 다가온 지방소멸 문제가 우리가 앓고 있는 중병의 명백한 증빙들이다. 밑도 끝도 없는 이기심이 문제고, 이는 이타심의 회복 없이는 풀리지 않는다. '이타가 곧 이기'라는 상식의 회복을 기대한다. 로컬은 이대로 소멸돼도 좋은가? 아깝지 않은가? 서울만 남고 지역들은 다 사라져도 좋단 말인가? 우리 고향인데도? 맑은 피가 구석구석 흐르게 하자. 대한민국의 뿌리인 넓고 깊고 풍부한 로컬을 죽이지 말고 살리자. '행복한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로컬에 있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유튜브 채널 '도시의 정석' 운영
jerome363@uos.ac.kr



미식의 시작

20세기는 내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가'가 문제였다. 모든 관련 학문은 일제히 식량 증산과 분배 연구에 매달렸다. 덕분에 풍부한 시대가 됐다. 밀레니엄을 앞두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됐다. 앞선 급박한 산업화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양보다 질을 추구했다. 웰빙, 친환경, 유기농, 자연재배가 옵션으로 자리 잡아 현재까지 왔다. 이제 그다음,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가'의 시대가 비로소 오고 있다는 게 여러모로 감지된다. 나는 그 변화를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두 가지 다양성이다. 첫째, 이미 시작된 품종의 다양성이다. 제철에 접어든 겨울 딸기로 친다면 '설향'과 신품종들로 이야기할 수 있다. 2002년 한국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하면서 식물 품종 재산권이 도입됐다. 뭉뚱그려 말하자면 외산 품종을 재배하면 로열티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설향 이전에 우리가 먹던 딸기는 대개 일본 품종이었다. 재산권 발동까지 10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농정은 각종 작물의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과채류인 딸기는 품종 개량이 빠르다. 2005년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설향 품종이 출원됐다. 재배 측면으로는 단위 수확량이 우세하고, 병충해에도 강해 친환경 재배 적용이 쉬웠고, 맛에서도 우수했다. 앞선 두 시대의 덕목에 잘 맞았다. 재배 비중이 2007년 28.6%로 시작해 빠르게 확산됐지만, 부작용이 있었다. 딸기 다섯 중 넷이 설향 일색이었단 점이다.

2017년 무렵부터 다양한 딸기 품종이 쏟아져 나오며 겨울 딸기의 황금기가 시작됐다. 금실, 아리향, 싼타, 킹스베리, 만년설 등 신품종 딸기가 재배 면적을 나눠 가져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겨울 기준 신품종 딸기는 겨울철 과일 유통의 '핫이슈'다. 설화, 비타베리, 하이베리, 메리퀸, 홍희, 두리향, 알타킹, 써니베리 등 그야말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신품종들이 겨울 축제를 벌이고 있다.

품종이 다양하다는 것은 맛이 다양하다는 의미다. 맛에는 문자 그대로의 새콤달콤한 맛 이외에도 향과 질감과 수분감, 보디감까지 관여한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설향은 복숭아를 연상시키는 향이 나고, 절묘하게 단맛과 연약한 신맛이 조화를 이룬다. 지난해부터 주목받고 있는 비타베리는 단단하고 견고한 질감에, 비타민 사탕이나 요구르트 같은 단맛과 산미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깊고 두툼한 단맛에 장미꽃잎 향이 스치는 금실은 또 어떠한가.

다양성은 각각의 개성을 보장한다. 언제나 같은 딸기, 설향만을 먹는 것은 미식의 영역에서 동떨어져 있다. 오늘은 설향을 먹지만 내일은 비타베리를 선택할 수 있고, 다음 주엔 금실을 고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다양성의 미식이다.

둘째, 품질에 대한 다양성도 조금 더 먼 미래에 주류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여기서 얘기하는 품질은 '완성도'다. 이전의 친환경, 유기농 등이 추구하는 품질은 식품 안전성에 대한 것이었다. 앞서 설명한 맛의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과로 완성도를 높이려는 장인(匠人) 생산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같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양은 적지만 대신 높은 질을 얻어낸다.

현재 50개 중 40개를 솎아내고 10개만 잘 키우는 장인들의 결과물은 시장의 보상을 합당하게 받기 힘든 구조로 돼 있지만, 이 새로운 시장 카테고리는 명백히 꿈틀대는 태동의 단계다. 최고, 최선의 완성도를 구현해 내는 데에 성공한 초고품질 농작물을 소비하는, 가격 민감도가 낮거나 없는 프리미엄시장이 새로이 카테고리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양한 품종을 섬세하게 선택하고, 여러 가지 층위의 품질 사이에서 그때그때 여건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다양성의 세상이 오는 것이 나에겐 무척 반가운 일이다.



이해림 푸드 칼럼니스트
『탐식생활』 저자, 농산물 유통사 '포르테' 대표
contets.forte@gmail.com

가능성이 가득한 새해를 열어젖히고 싶다면

신은혜 『가능한 불가능』

"이대로는 새해 기분이 전혀 안 나잖아!" 이대로 가다간 작년과 똑같은 한 해가 될 거라고, (…)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재재재작년에 열심히 일한 거 말고 기억나는 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다. S는 대답이 없었다. -p.14



대답이 없는 S의 마음을 이해한다. 12월의 문턱에 서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내다보는 나의 마음도 비슷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은 "열심히 일한 거 말고 기억나는 게" 있는지 없는지와는 사실 크게 상관없다. 분명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틈틈이 좋아하는 공부도 했지만, 막상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보니 지난해에 비해 딱히 다른 것이 없어 보였고 새해도 딱히 새로울 것 없어 보였다. 다소 맥 빠지는 마무리였다.

이럴 때 누가 나에게 올해는 인생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온 것 중 하나에 도전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고, 심지어 같이 개설한 통장에 매달 2만 원씩 입금해서 모인 돈 50만 원을 12월 31일에 목표를 이뤄낸 한 사람에게 상금으로 몰아주자고 내기(?)까지 제안한다면 당장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S가 그런 것처럼. 훗날 '할 수 있어 프로젝트'라고 두고두고 불릴 이 제안을 한 사람은 현재 12년 차 광고 카피라이터인 작가 신은혜였고, 『가능한 불가능』은 그가 1년에 하나씩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이 프로젝트를 무려 9년간 해온 과정을 담은 책이다.

책의 목차도 그가 9년간 도전해 왔던 아홉 가지의 일로 이뤄져 있다. 방향치에 교통사고 트라우마도 있어 엄두를 내지 못했던 운전면허시험에 도전해 면허증을 따내는 것을 시작으로 계이름도 잘 모를 정도로 악보를 읽을 줄 모르지만 히사이시 조의 'Summer' 한 곡을 연주해 내기 위해 피아노학원 기초반에 등록해 1년간 맹연습을 하고, 다음 해에는 영어학원 초급반에서부터 공부를 하는 식이다.

그가 두려움을 딛고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에 작은 첫발을 내딛는 순간들만으로도 이미 커다란 감동이지만, 그가 그 무언가에 점점 푹 빠져들어 그것을 중심으로 일상의 풍경이 달라지고 그 안에서 온몸과 온 마음을 쏟아내는 과정을 보는 기쁨이 굉장하다. 무엇보다, 첫 번째 도전인 운전에서 이룬 성취감을 단단한 버팀목 삼아 기초도 없는 피아노에 도전하고, 그 경험이 역시 기초가 부족한 영어에 도전하게 만들었으며, 그 도전에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는 습관을 얻고 외국에서 살아보겠다는 꿈을 얻어 다섯 번째 도전으로 진짜 하와이에 가서 살게 되고, 하와이에서 살겠다는 목표가 수영에 도전하게 만든 것처럼, 도전과 도전이 서로 이어지며 한 사람의 세계가 점점 확장돼 가다가 그가 상상도 못 했던 미래로 가닿는 여정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그 어떤 자기개발서에서도 느끼지 못한, 당장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 아주 구체적이고 뜨거운 열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난 할 수 있다, 아무리 다짐해봐도 그건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신, 별거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직접 해보며 할 수 있다는 '경험'을 얻는 게 중요했다. (…) 내가 처음부터 도로를 달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온라인 서점에서 운전면허 문제집을 주문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p.256

이왕 올 한 해를 보람차고 재미나게 보내고 싶다면 이 책으로 시작해도 좋겠다. 온라인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주문하는 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 가능성으로 가득한 어떤 세계에 의미심장한 첫발을 뗄 수 있도록 이 책이 등을 힘껏 밀어줄지도 모른다.

김혼비 에세이스트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아무튼, 술』, 『다정소감』 저자
vgbd81@hanmail.net

‘복지 사각지대’ 온 마을이 돕는 체계 만든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대책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오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지원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2023년 1월 기준 18개 기관으로부터 단수,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 39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이 중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약 18만 명의 ‘중앙 발굴대상자’를 선정해 지자체로 통보한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담당 공무원은 중앙 발굴대상자 및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선정한 발굴대상자(‘자체 발굴대상자’) 명단을 갖고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해 각 가구의 위기상황을 확인한다. 실제로 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종합상담과 통합 사례관리를 거쳐 각 가구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복지, 건강, 고용, 돌봄, 금융 등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위험가구 458만여 명을 발굴했으며, 상담을 통해 188만여 명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기타 공공·민간 서비스를 지원했다.

위기정보 입수 수단 다양화하고 위기가구 발굴 체계화

그럼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가 미처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가구의 사망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바로 여기 해당한다. 수원 세 모녀는 건강보험료 체납정보가 입수돼 주소지 관할 담당 공무원이 자택으로 방문했으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연락처가 없어 추가적인 상담과 지원이 어려웠다. 수원 세 모녀는 이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수원시 모처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생전 세 모녀는 중증질환과 채무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이 악화된 위기가구가 의사와 의료사회복지사, 지자체 연계를 통해 조기 치료, 지역사회 복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가 개발, 사회복지사 배치 강화 기준 마련

집배원, 민간 자원봉사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도 협력해 지역 기반의 발굴 강화할 것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전담팀을 구성해 관계부처, 현장 복지 종사자,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위기가구를 첫째, 정확하게 발굴해 둘째,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셋째,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시스템, 지자체 전달체계, 지역 인적안전망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정확히 발굴한다. 먼저 중증질환 등 질병, 채무, 실업 등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위기정보를 추가로 입수할 것이다. 대책 발표 전 34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던 것에서 지난 11월 5종, 올해 하반기 5종을 각각 추가 입수해 총 44종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입수된 위기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의 위기상황을 분석하고, 위기정보 입수 주기도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보다 정확

한 최신정보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더불어 시스템과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 공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기반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건강이 악화된 위기가구가 병원 내 의사-의료사회복지사-지자체 연계를 통해 조기 치료, 지역사회 복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개발하고, 의료사회복지사 배치 강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집배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민간 자원봉사단인 '좋은 이웃들' 등 지역안전망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의 위기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 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1월 22일 대구 중구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봉사자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연탄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둘째, 발굴대상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한다. 먼저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발굴대상자의 연락처, 다가구주택 동·호수 등의 정보를 신규로 연계한다. 연락처 및 거주지 정보를 토대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중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거주지에 출입해 구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전 국민 복지멤버십 가입 독려, 생애주기별 사회보장급여 안내

또한 복지정보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미리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에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하도록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다. '복지멤버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관, 병원 등 평소 이용하던 민간기관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발굴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대 폭인 5.47%(4인 가구 기준) 인상된다. 주민등록지 외의 실거주지에서도 긴급복지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발굴된 위기가구 중 복합적 위기가 있는 경우 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해 필요에 따른 공공 및 민간 자원 연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 증가, 사회적 연대 약화 등 달라진 사회 여건에 따라 복지지원이 필요해진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적 고립에 처해 있는 가구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2022년 8월~2023년 12월)을 실시하고 2024년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청년을 위한 맞춤형 발굴·지원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정보 연계, 민관협력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도 본인이 실직, 질병, 채무 등으로 형편이 어렵거나 이웃의 위기상황을 발견할 경우 주저 말고 129 보건복지콜센터, 복지로 '도움요청' 페이지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기 바란다. 온 마을이 함께 위기가구를 도와 이웃 모두가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진희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ojh2000@korea.kr

‘공공임대+공공분양’ 균형 잡힌 공급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넓힌다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

우리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부분 고단한 하루 끝에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만의 포근한 공간’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외부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아지면서 ‘집’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업무, 학습, 여가 공간 등으로 그 외연을 확장했고, 우리 삶에서 ‘집’이 갖는 의미가 커짐에 따라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도 점차 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가구의 주택보유 의사는 2017년 82.8%에서 2021년 88.9%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2017년 70.7%에서 2021년 81.4%로 늘어 모든 가구유형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자가보유율은 일반가구 60.6%, 청년층 15.7%로 주택보유 의사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 기회는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2023~2027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 ©연합뉴스

앞으로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해 청약 기회 제공

이에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공공임대 중심’의 정책기조를 ‘공공임대+공공분양의 균형 잡힌 공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앞으로 5년간(2023~2027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주택 50만호(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11월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 발표됐다. 공공분양주택의 세부 공급모델과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나눔형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서 처음부터 시세의 70% 이하로 저렴하게 분양받되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때 수분양자가 처분손익의 70%(나머지 30%는 공공 귀속)를 얻게 된다. 기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주택 보유기간 등에 비례해 환매가격이 산정되는 구조여서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환매가격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나눔형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 의무기간 이상만 주택을 보유하면 환매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청약자격은 이번에 신설된 청년 유형의 경우 대기업 사회초년생에게도 정책지원이 미칠 수 있도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가구원 수별 1인 기준)의 140%(2022년 기준 약 450만 원), 순자산(본인 기준) 2억6천만 원(2022년 기준) 이하로 정하며, 신혼부부·생애최초자 유형은 월평균 소득 130%(신혼부부 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100만 원(2022년 기준) 이하로 정한다. 다만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천만 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면 청년 유형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공급비율은 전체 물량의 80%를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한다.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는 일하는 청년(근로기간 5년 이상)을 배려하고자 이들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공급하는 한편, 혼인 장려 등을 위해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공급한다. 또한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추첨을 통해 생애최초자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일반공급은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해 일반공급 물량의 80%는 순차제(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로, 2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기존 공공분양 제도 개편해
무주택 4050 세대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선택형 주택은 6년간 임대 거주하고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금액(분양 시 감정가 이하)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을 위한 선택권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청약자격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및 일반공급의 경우 나눔형과 동일(다만 선택형의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 수별 가구당 소득 적용)하며, 다자녀·노부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100만 원(2022년 기준) 이하로 제한한다. 공급비율은 전체 공급물량의 90%를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하고,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한다. 한편 입주자 선정방식은 청년, 생애최초자, 일반공급의 경우 나눔형과 동일하며,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배점제(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로 신혼부부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다자녀는 배점제 100%, 노부모는 순차제 100%로 공급한다.

이번 공공분양주택은
시세 70% 이하로 공급받고 거주 의무기간 이후
처분손익의 70% 얻는 나눔형 주택,
6년간 임대 거주 후
내 집 마련을 정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
무주택 4050 세대에
일반공급 비중 늘린 일반형 주택으로 구분

일반형 주택은 기존 공공분양 청약제도를 개편해 비교적 자금 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고,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첨제(일반공급 물량의 20%)를 신설한다. 또한 특별공급 자격을 신혼부부의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까지, 생애최초자의 경우 자녀 기준을 미성년이 아닌 미혼 자녀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청약자격과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4050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30일 고양창릉지구 등 시범단지의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등 앞서 국민들께 약속한 맞춤형 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에 있어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품질 개선, 평형 확대, 주거서비스 강화 등 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공공주택 세부 공급방안이 누구나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이소영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lsoy0824@naver.com

“중소기업 대표님, 더 이상 교육훈련 주저하지 마세요”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글로벌 제조기업 제너럴 일렉트릭(GE)은 1892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최근엔 디지털 기술까지 접목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GE의 꾸준한 성장비결은 무엇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인적자원 전문가들은 크로톤빌 연수원을 핵심요인으로 손꼽는다. GE는 크로톤빌 연수원을 통해 인재를 차세대 리더로 직접 양성하고 있다. 잭 웰치 GE 전 회장은 1983년 대규모 구조조정 상황에서도 크로톤빌 연수원에 4,6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투자수익을 얼마 동안 회수할 수 있느냐는 사업계획안 항목에 ‘무한(infinite)’이라고 적었다. 국내 대기업들도 크로톤빌 연수원을 벤치마킹해 자체 연수원을 구축하고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들어 핵심인재를 직접 키우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들은 기업의 혁신과 변화의 원동력을 인재로 보고 교육훈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2021년 정부 지원 훈련제도에 참여한 중소기업,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4.5%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어떤 상황일까? “교육훈련이 밥 먹여줍니까?” 교육훈련을 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자조 섞인 말이다. 중소기업은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운영할 전담자가 없고,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으니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훈련생을 대체할 인력이 없다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훈련기간 동안 훈련생의 임금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한다. 여러모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교육훈련이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기업이 직접 혹은 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정부 지원 훈련제도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단 4.5%인 11만 개소에 불과하다. 고용부가 실시한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은 주로 훈련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모름(38.9%), 훈련을 운영하고 관리할 전담인력이 없음(20.7%), 훈련비 지원절차가 까다로움(16.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회사경영에 근로자의 숙련부족이 문제(33.0%)라고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41.0%)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훈련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1월 24일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학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공동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훈련센터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난 4월 19일 서울 종로구 거리에 직장인들이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기업이 직업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훈련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리방식을 개선했다.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해 기업이 연간계획만 제출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하고 변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에는 훈련과정별로 최소 4시간 이상 편성하도록 하는 규제도 철폐해 기업이 필요한 훈련이라면 1~3시간 과정에도 훈련비가 지원된다.

또한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학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공동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훈련센터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공동훈련센터 중 우수한 기관은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해 훈련과정을 한 번만 승인받으면 이후 동일한 과정을 재개설할 경우 다시 승인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훈련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2023년 신규 훈련과정도 사전승인 없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예산총액 내에서 임차비, 회의비, 자료·비품비 등 세부항목 구애 없이 훈련에 필요한 용도에 맞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내용과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한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해 사업주가 위탁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하고, 그중에서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과정만 수강할 수 있다. 구독료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서비스 방식을 정부지원 원격훈련에도 도입한 것이다. 훈련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재직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10분 이내의 숏폼 콘텐츠와 1~2시간의 마이크로러닝 과정도 패키지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파악해 사업주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주는 이를 찾아 위탁훈련기관과 계약을 해야 했다. 사업주로서는 기업 내 모든 근로자 개개인의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매번 훈련과정을 신청하는 것도 불편했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통해 한 번의 계약만으로 근로자 주도의 직업훈련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근로자 만족도도 높아졌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의 평균 훈련인원은 39명으로 일반 원격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의 평균인 20명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제도'도 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면상담 외에 줌과 같은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상담이 가능하고, 이미 납부했던 자기부담금 10%도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기업의 자율성은 높이고 근로자의 선택권은 키우고

셋째, 기업의 훈련비용과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를 도입해 위탁훈련비용 부담을 줄이고, 훈련을 신청하는 데 불편한 절차도 덜어준다. 그간 중소기업이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훈련비의 10%는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해서 참여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 이제 중소기업은 기업직업훈련카드를 이용해 위탁훈련을 할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는 직업훈련의 참여 문턱을 낮춰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고, 직업훈련의 성과를 기업이 체감하면 향후 지속적인 직업훈련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설계된 제도다. 2022년 짧은 시범운영 기간(8~11월)에도 불구하고 964개 기업이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2019~2021년 정부 지원 훈련제도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규 훈련기업이 절반 이상(514개소, 53.3%)을 차지해 직업훈련 활성화라는 해당 사업 취지의 달성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아울러 복잡한 훈련비 단가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소분류 269개 직종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훈련비 지원단가를 대분류 24개 직종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단순화한다. 이로 인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 훈련직종이 NCS 269개 직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행정부담이 줄어든다. 일부 직종은 훈련비 지원단가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 디지털·신산업의 등장과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압박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전략으로 그 무엇보다 인적자원이 중요하다. 기업의 결과물은 결국 조직구성원의 활동에 의해 산출된다. 물적자원은 고정된 가치지만 인적자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는 자원이다. 교육훈련비는 비용이 아니라 무한한 수익 회수가 가능한 투자다. 훈련을 주저하는 중소기업 대표들께 교육훈련은 미래성장 먹거리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제언을 드리며, 고용부는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종호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장
deniskim@korea.kr

북극점에서 남극 내륙까지, 대한민국의 새로운 극지 여정이 시작된다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

남극 빙하의 수천 미터 아래에는 호수가 있다. '빙저호(氷底湖)'라고 불리는 이 호수는 수백만, 수천만 년간 햇빛이 들지 않는 고립된 환경으로 존재해 왔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환경에서도 생명체는 살아남았다. 빙저호 탐사는 곧 우주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알아낼 열쇠가 돼줄 것이다. 이처럼 극지는 지구의 끝단에 위치해 있지만 인류의 미래 문제를 풀어나갈 실마리이기도 하다.

빙저호뿐만 아니라 남극 내륙에 있는 수천 미터 두께의 빙하에는 지구의 과거 기후가 그대로 담겨 있어 기후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된다. 또 북극에서 빙하가 녹으면 우리나라에 이상 한파 현상이 나타나는 등 극지 변화는 전 세계 기후와 해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림에 따라 새로운 물류루트인 북극항로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 안전한 북극항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극지 선도국으로서의 역량 입증과 기후변화 대응 같은 시대적 소명 부여받은 우리나라

이러한 극지의 중요성을 인지한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극지에 과학기지를 건설하고, 경쟁적으로 극지 탐사와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극지 과학연구는 선진국 대비 약 30년 늦은 1988년에 세계 18번째로 남극 상주기지인 '세종과학기지'를 건립하면서 시작됐다. 과학기지는 남극의 빙하와 환경, 생태계를 연구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됐으며, 극지에 대한 연구역량을 비약적으로 증대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2002년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2014년엔 남극 제2기지인 장보고과학기지를 건립했다. 과학기지가 육상의 연구근거지라면, 쇄빙연구선은 바다의 연구근거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첫 번째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를 건조했고, 이를 통해 남북극의 바다를 누비며 연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극지연구의 핵심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은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2003년에 세계 최초로 남극에서 미래자원인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매장량을 산출했고, 2014년에는 북극 해빙(海氷) 감소가 동아시아 지역의 잦은 한파와 폭설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성과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우리나라는 이제 극지 거버넌스에서도 신뢰받는 중요한 파트너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지금까지의 위상은 '추격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성큼성큼 도약해 '선도자' 그룹에 속해야 한다. 극지 선도국은 과학연구를 바탕으로 전 지구적 현안 해결에 기여하면서 미래 극지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국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우주로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역량을 보유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극지에서도 인류 미지의 영역을 누비면서 선도국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의 생존과 진보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소명을 갖고 정부는 지난 11월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가 극지활동 선도국이 되기 위한 국가전략의 성격을 지닌다. '국민을 위한 극지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으며 대표 과제들은 '극지 프런티어 과제'로 명명해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남북극 미지의 영역'에 대한 탐사를 확대한다. 먼저 2030년까지 남극 내륙에 세계 6번째 기지를 건설한다. 기존 남극기지는 해안에 위치해 내륙에서만 할 수 있는 연구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선도국들은 내륙에서 아주 오래된 빙하를 경쟁적으로 탐사하고 있으며, 내륙기지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연구를 안정적으



우리나라는 2009년 첫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를 건조했고 이를 통해 남북극의 바다를 누비며 연구할 수 있게 됐다. 해빙연구를 위해 아라온호에서 내린 연구원들. ©극지연구소 극지미디어

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근거지가 될 것이다.

2027년부터는 두 번째 쇄빙연구선인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세계 최고 수준의 쇄빙능력(1.5m/3노트)으로 북극 연구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 쇄빙연구선 한 척으로는 연구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북위 80도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새로운 쇄빙연구선이 건조되면 극지 연구일수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북극점을 포함해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고위도 북극 바다까지 나아가 해빙현장 관측, 북극해 공해상의 수산자원 모니터링 등의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극한 환경을 극복하는 각종 기술개발
극지산업은 물론 다른 산업 부문까지 파급 기대돼

둘째 전략은 글로벌 현안인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것이다. 북극에서의 해빙변화가 우리나라 사계절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은 물론 온난화로 북극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 미생물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해 인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남극 빙하가 녹는 원인을 밝히고, 미래 해수면 상승을 예측한다. 남극 빙하가 모두 녹으면 전 지구 해수면은 약 58m 상승해 우리나라도 침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 남극 빙하 관측자료를 확보해 2030년, 2050년, 2100년의 해수면 상승 예측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남극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는지, 전 지구 해수면을 '얼마나 상승'시키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셋째,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극지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북극 바다에서 운송 가능한 '친환경 쇄빙컨테이너선'과 안전운항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해 우리나라 선사들이 북극항로에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극저온과 강풍 등 극한 환경을 극복하는 통신기술과 무인이동체, 건설기술도 개발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향후 우주나 심해 등 다른 극한지를 탐사하는 기술로도 파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극한 환경에서 생존한 극지 생물자원을 활용해 항생제와 치매치료제, 항균·면역조절 물질 등 신규 의약물질을 개발함으로써 해양 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넷째와 다섯째 전략은 앞서 언급한 전략들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다. 극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극지정책협의체'를 구축하고, 북극권 8개 국가와 맞춤형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쇄빙연구선과 같은 인프라를 민간에 공유하고 극지 장학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이 극지 선도국가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해법을 제시하며, 극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미래를 그려본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이러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극지 여정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

노재옥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joroh@korea.kr

세계는 지금

OECD

OECD 등 국제기구나 세계 각국에서 최근 다뤄지는 정책 이슈와 동향을 생생하게 소개한다.

2023년 세계경제, 위기에 맞서서

「세계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



이호근
주OECD대표부 참사관
hglee22@mofa.go.kr

OECD는 매년 두 차례 「세계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간해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예상한다. 지난 11월 22일엔 '위기에 맞서서(Confronting the Crisis)'란 부제로 2023~2024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OECD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경제가 직면한 과제와 이에 대응한 글로벌 경제정책 권고를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에너지 위기가 가져온 고물가·저성장

'위기에 맞서서'라는 부제에서 보듯 2023년 세계경제는 여러 가지 도전에 마주하고 있다. 성장동력은 식어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 신뢰지수도 기준점을 하회하는 등 경제의 하방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추정치에 따르면 OECD 국가의 GDP 대



OECD는 2023년도 세계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세계 금융중심지인 뉴욕 월가에 서 있는 황소상과 두려움 없는 소녀상.

비 에너지 최종소비지출 비율은 1970년대 제1·2차 오일쇼크 당시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상승 추세에 있던 인플레이션은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으며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에너지, 식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품목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OECD는 G20 국가의 물가상승률을 2023년 6.0%로 전망하며 전년도의 8.1%에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점진적 감소 추세에도 당분간은 목표치 대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다. 이러한 통화긴축 추세는 선진국, 신흥국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통화정책에서의 동조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급격한 금리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부채상환 부담을 가중하며 금융취약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위험회피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악화됐고,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강달러로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다.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견고하나 임금 상승이 물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 에너지 및 식료품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이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실질소득 증가세는 약화되고 있으며, 이자 부담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OECD는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팬데믹 이전(2013~2019년 평균 성장률은 3.4%) 대비 1%p 이상 낮은 수준인 2.2%로 전망했다. 세계교역 증가율도 원자재 수입국의 수입 수요 약화 등으로 2023년 2.9%로 둔화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 북미 지역의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인 아시아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며 2023년 세계경제 성장의 4분의 3가량을 담당할 것이다.

먼저 미국의 경우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가 성장을 제약(2022년 1.8% → 2023년 0.5%)하고 있다. 다만 수요가 점차 약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높은 에너지와 식량 가격,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성장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2022년 3.3% → 2023년 0.5%)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수준으로 기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2022년 1.6% → 2023년 1.8%)한다. 다만 고유가,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등으로 이 같은 추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반복적인 봉쇄정책, 주택투자 부진 등이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새해에는 소폭 회복이 예상(2022년 3.3% → 2023년 4.6%)되고 있으나 향후 팬데믹 이전 수준의 고성장 추세로 복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최우선 정책과제는 인플레이션 대응, 재정지원은 선별적·한시적으로 해 물가 압력을 높이지 않아야

에너지·식량 위기로 높아진 무역장벽 제거해야 경쟁 촉진돼 공급 충격 완화될 것

<표> OECD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2022.11.22.)

	2022년	2023년	2024년
전 세계	3.1	**2.2**	2.7
G20	3.0	**2.2**	2.7
유로존	3.3	**0.5**	1.4
호주	4.0	**1.9**	1.6
캐나다	3.2	**1.0**	1.3
독일	1.8	**-0.3**	1.5
프랑스	2.6	**0.6**	1.2
이탈리아	3.7	**0.2**	1.0
스페인	4.7	**1.3**	1.7
일본	1.6	**1.8**	0.9
한국	2.7	**1.8**	1.9
멕시코	2.5	**1.6**	2.1
튀르키예	5.3	**3.0**	3.4
영국	4.4	**-0.4**	0.2
미국	1.8	**0.5**	1.0
아르헨티나	4.4	**0.5**	1.8
브라질	2.8	**1.2**	1.4
중국	3.3	**4.6**	4.1
인도	6.6	**5.7**	6.9
인도네시아	5.3	**4.7**	5.1
러시아	-3.9	**-5.6**	-0.2
사우디아라비아	9.8	**5.0**	3.5
남아프리카공화국	1.7	**1.1**	1.6

인플레이션 완화되면서 2024년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 전망, 에너지 공급 교란과 금융 불안정 심화는 위험요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어하기 위한 통화긴축은 세계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점진적인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에 따라 2024년 이후 성장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OECD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OECD가 지적하는 주요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로부터의 가스공급이 감소하면서 유럽 각국은 이를 대체할 공급원을 찾고 있으나 장기투자가 필요한 가스시장의 속성상 쉽지 않은 일이다. 상반기 기저효과의 차이와 공급 교란으로 2024년에는 더욱 어려운 겨울을 보내게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급격한 통화긴축에 따라 그간 누적된 금융취약성이 두드러질 수 있다. 가계 및 기업의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만기 연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변동금리부 모기지 비율이 감소해 왔으나 몇몇 국가는 그 비율이 여전히 높다. 비금융 기업의 부채는 GDP의 141%(2021년 OECD 중위국가 기준)로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이며 추가적인 긴축에 따라 원리금상환 부담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긴축적 금융환경, 증가된 부채, 달러 강세는 신흥국의 취약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많은 신흥국이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 자본 유출, 외환보유고 감소 등을 겪고 있다. 특히 원자재 수입국의 경우 교역조건 악화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통화정책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한 국가의 금리상승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며 또다시 역으로 그 국가에 여파를 가져온다. 특히 미국의 금리상승이 세계 금융시장에 가져올 위험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시점에서는 과도한 긴축의 부작용보다 과소긴축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강한 듯하다.

현시점에서 최우선 정책과제는 인플레이션 대응이 돼야 한다.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실질 정책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 전방위적인 물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요구된다. 재정정책은 물가 압력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상쇄하기 위한 지원은 선별적이고 한시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다.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위한 투자는 피할 수 없다. 에너지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은 탄소배출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높은 에너지 가격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무역 흐름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식량 위기에 따라 추가된 무역장벽은 특히 저소득층의 고통을 심화하고 세계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역장벽 제거는 경쟁압력을 높여 공급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튼튼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을 장려해야 한다. 특히 남녀 간 고용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의 인적자본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렵고 불확실한 시기에 정책은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고용과 생산성을 촉진하고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들은 구조적인 문제에 새롭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OECD는 매년 두 차례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한다. 사진은 지난 6월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 앞서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왼쪽)과 로렌스 분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년 논의 끝맺을 결심

유전자원 등의 보호에 관한 WIPO 정부 간 위원회



이진용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jylee22@mofa.go.kr

지난해 7월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뉴 콘퍼런스 홀. 193개 WIPO 회원국의 지식재산 분야 수장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2019년 10월 이후 3년 만에 WIPO 총회가 대규모 대면회의 형태로 열린 것이다. 올해 제63차 총회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지식재산 시스템 지원을 위한 제안서 채택, 그리고 오랜 시간 지속된 두 가지 WIPO 상설위원회 논의에 대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 개최 제안서 채택이 그것이다. '국경 간 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디자인 보호에 관한 협정'과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관련한 두 가지 상설위원회 논의 중 이 글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원 등의 보호에 관한 논의' 경과와 쟁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WIPO와 유전자원의 만남 그리고 IGC의 탄생

유전자원 등의 보호에 관한 논의는 유엔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기구인 WIPO의 5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 전승물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IG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

유엔 지식재산 분야 전문기구인 WIPO의 IGC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안, 이들을 활용해 취득한 지재권으로부터 얻는 권리자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 등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에서 이뤄지고 있다. 유전자원(GR), 전통지식(TK)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안 그리고 이들을 활용해 취득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으로부터 얻는 권리자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 등을 핵심적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기업이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식물(GR)이나 민간요법(TK) 등을 활용했을 때 해당 의약품이나 화장품과 관련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료나 아이디어 제공자 측과 배분하기 쉽도록 관련 지재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지재권을 취득하는 쪽은 주로 선진국이고,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을 제공하는 쪽은 주로 최빈개도국이기 때문에 WIPO 논의에서 양 진영이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유전자원 보호와 이익 공유라는 개념은 1992년 5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 시작됐다. 이 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에서 생기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중 '유전자원 이용과 이익 배분'이라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보충 협정으로, 계약 당사자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access), 이익 공유(benefit-sharing) 및 준수(compliance)와 관련해 조치할 의무를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2010년 채택됐다. 의정서 제3조는 유전자원(GR)과 함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K)도 협정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생물다양성 협약 체결 이후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해 협약 이행을 위한 논의를 실시했다. 1998년 제4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회의에서 GR, TK 보호에 관한 논의가 지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논의를 유엔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기구인 WIPO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WIPO는 관련 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1998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남미와 동남아 등 28개국의 GR, TK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시행했으며, 2000년 10월 총회 의결로 관련 논의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IGC)' 설치를 결정하고, 2001년 4



IGC 회의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외에 민화, 시, 노래, 춤, 연극 등 민간 전승물에 관한 전통문화 표현물도 논의 주제로 다루고 있다. 사진은 페루 쿠스코 지역축제에서 전통 무용을 선보이는 무용수들.

월 최초의 유전자원 관련 지재권 논의로서 제1차 IGC 회의를 개최했다.

2001년 시작된 IGC 회의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외에 민화, 시, 노래, 춤, 연극 등 민간 전승물(Folklore)에 관한 전통문화 표현물(TCEs;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도 논의 주제로 포함했고, 세부 주제와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10년 제17차 회의에 이르러서야 문안 협상(text-based negotiation)을 시작했다. 이후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협상기한에 도달하자 2011년 제49차 WIPO 총회에서는 IGC 협상기한을 2013년까지 연장하고, 회의 개최 주기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3회로 늘리면서 논의방식도 한 회의에서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도록 결정했다.

다음 해인 2012년 열린 제20차, 21차 회의에서는 주제별(GR, TK, TCEs) 단일 문안을 완성했고, 2019년까지 협상기한을 계속 연장해 가면서 회차를 거듭해 문안 간결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2020년 3월로 예정됐던 제41차 회의가 글로벌 팬데믹을 이유로 잠정 무기한 연기된 후 1년 반이 지난 2021년 8월에서야 논의가 재개됐고 그동안 회의는 공전했다. 2022년 들어 팬데믹이 사그라들자 WIPO 사무국은 그간 밀렸던 진도를 빼려는 듯 연말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계획해 지난해 2월, 5월에는 GR에 관한 제42, 43차 회의가 열렸고, 9월과 12월에는 TK, TCEs에 관한 제44, 45차 회의가 개최됐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유전자원·전통지식 출처 공개에 이견, 공평한 이익 공유 관점도 달라

IGC 회의에서는 유전자원 이용국인 선진국 진영과 유전자원 제공국인 최빈개도국 진영 간에 뚜렷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먼저 실질적 내용 측면에서 보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그리고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유(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 방식을 두고 각국의 재량에 맡기자는 선진국과 정부 주도 방식으로 이행하자는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 체결될 협약이 갖는 성격과 관련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 형태로 가자는 선진국 측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 규범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개도국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2년 미국은 단일 문안과 별개로 유전자원 이용국인 선진국 견해를 반영해 GR, TK, TCEs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특허 심사과정에 이를 활용함으로써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특허 신청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기존 GR, TK 등을 방어적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안했고 우리나라, 일본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를 포함한 선진국 진영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특허 등을 출원할 때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의 출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GR·TK 제공국은 특허출원서에 해당 발명에 이용된 GR·TK의 출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뿐 아니라 GR·TK 사용자와 제공자 간의 사전통보 승인(PIC; Pre-Informed Consent) 그리고 공평한 이익 공유의 증거도 함께 제출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GR·TK 이용국은 발명에 사용된 GR·TK의 출처와 지재권 등록요건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이러한 절차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출원인과 각국 특허청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보호 방법에 관한 것이다. GR·TK 이용국은 분쟁해결 절차는 계약 당사자 간 자율성으로 결정하고, 사적 계약을 통해 공평한 이익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며,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특허(지재권)가 등록되지 않도록 GR·TK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를 특허청 심사관이 활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하지만 GR·TK 제공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방어적 보호는 GR·TK 관련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고, 현 지재권 제도로는 GR·TK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협약을 통한 각국가의 국내법 개정과 정부의 개입(점검기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 밖에 잘못된 특허가 허여됐을 때 특허를 취소하는 등 제재수단을 포함할지, 널리 알려진 TK·TCEs를 예외로 할지 그리고 수혜자는 누구까지로 한정할지 등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총회 결정에 따라 2024년 외교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WIPO 회원국들은 특별 세션과 외교회의 준비위원회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20년 넘게 진행됐고 최근 몇 년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쳇바퀴 돌듯 공전하던 IGC 논의가 마침내 마감시한을 부여받았다. 더 이상 성과 없는 논의를 지속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양 진영이 각자의 최종 입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협상의 결과물로서 제시될 국제협약의 틀과 수준을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구슬을 가진 사람도 그 구슬을 꿰는 기술자도 모두 서로가 절실한 공생 관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승자가 되는 상생 전략이 절실해지는 이유다.

애 한 교 직
愛恨交織; 사랑과 미움이 복잡하게 뒤엉킴

중국과 축구의 관계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막을 내렸다. 월드컵 기간 전 세계의 이목이 카타르에 쏠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국팀이 출전한 국가든 그렇지 못한 국가든 한 달 넘게 축구 열풍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에서도 자국 대표팀을 TV에서 볼 수 없었던 14억 인구의 중국은 어땠을까?

중국의 대표적 SNS 채널인 위챗 모멘트나 틱톡에는 개인의 실시간 월드컵 시청 현황을 알리거나 우승팀을 점쳐보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적지 않은 치우미(球迷, 중국 축구팬)들은 카타르로 날아가 실시간으로 경기를 생중계하는 등 현지 축구 열풍을 생생하게 전하며 자국팀 부재로 인해 중국인들이 느끼는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도 했다. 중국인들은 코로나와의 장기전에 지친 마음을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며 달랬는지도 모르겠다.

필자도 지난 12월 3일 있었던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경기를 중국 CCTV 방송국 중계를 통해 시청했다. 일본 경기에 이어 우리나라 경기에 보이는 해설자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우리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16강에 진출하자 이에 대한 설왕설래 역시 각종 SNS에 넘쳐났다. 경기가 있던 다음 날 아침 중국 지인으로부터 한국팀의 16강 진출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카타르 월드컵에 중국은 선수 빼고 다 보냈다"

중국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쏟아부은 기업 후원금은 13억9,500만 달러라고 한다. 실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중국 기업의 이름을 중계 화면에서 볼 수 있었다. 카타르 월드컵 주경기장을 지은 곳도 중국철도건설이라는 국영기업이다. 각종 월드컵용품의 70%를 중국 저장성 이우시의 소상품시장에서 조달해 갔다는 사실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트위터나 다수 내외신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상품, 기업, 산업 등 중국의 요소들이 타국 월드컵에 가득 반영됐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비록 자괴감이 섞이긴 했지만, 오죽하면 이번 월드컵에 중국은 선수 빼



지난 2021년 10월 12일 FIFA 월드컵 카타르 아시아지역 B조 예선 경기가 끝난 후 중국 선수들이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 2대 3으로 패했다. ©연합뉴스

고 다 보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을까.

이쯤에서 중국이 월드컵을 바라보는 시각, 중국과 축구라는 스포츠 간의 관계를 생각해 봤다. 애한교직(愛恨交織), 무척이나 아끼고 좋아하지만 그만큼 아쉽고 미운 마음이 앞서는 애증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축구 이외의 종목에서는 국제무대에서 중국 선수의 우승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중국은 이제 하계올림픽은 물론 동계올림픽에서도 서양이 강국이라 여겨져 왔던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 세계를 놀라게 하곤 한다.

그런데 왜 중국은 유독 축구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까? 필자가 주변 중국인들에게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했을 때 중복해서 돌아온 답변은 "중국 축구 프로리그에서 받는 대우가 상향 평준화돼 있다 보니 선수들이 팀에서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웬만하면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외국인 용병 선수들과 경쟁해 실력을 키우려 하기보다는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현실에 쉽게 안주한다" 등이었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중국인들이 이 문제를 생각보다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잠시 축구를 제쳐두고 중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앞에서 끌어당기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공고히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산업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국민 스포츠 부문 소비 규모는 2021년 기준 2조 위안(약 400조 원)을 돌파했다. 2008년, 2022년 두 번의 올림픽이 중국 스포츠와 레저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을 것이다. 또한 스포츠산업이 디지털, 스마트와 만나 ICT 융합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공산당이 스포츠를 국민 통합과 단결의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하고자 한 측면도 있다. 시진핑 주석은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2013년부터 줄곧 현대적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목표로 '스포츠 강국 건설'을 내세워 왔다. 전 국민이 각종 스포츠를 손쉽게 접해 높은 수준의 스포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위 '건강한 중국'을 건설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정책이 국제무대에서 중국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쾌거로 이어져 중국인이라는 정체성과 국가, 당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전후로 스포츠 열풍을 비즈니스와 소비 촉진으로 연결하고자 많은 활동을 벌였다. 중국의 여러 공공기관에서 동계스포츠산업을 주제로 각종 포럼, 교류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기관들과 기업들을 초청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코트라도 이러한 분위기를 활용해 한국의 동계스포츠와 레저 관련 제품을 중국시장에 선보이고자 강원도 지자체와 협업해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린 후 첫 겨울이 시작된 지난 11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 중국 공공기관들은 자국의 동계스포츠 발전 현황을 알리고 다시 한번 동계스포츠 붐을 일으키기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중국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올해 6월 예정인 아시아대륙 축구 챔피언십인 아시안컵 개최는 포기했지만, 1년 연기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오는 9월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여러 한계에 부딪히면서 중국도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지자, 정부의 방역 조치도 한층 완화된 분위기다. 중국이 머지않아 오랜 빗장을 풀고 다시 해외와 자유로운 교류를 시작한다면, 올해 예정된 아시안게임 역시 중국의 스포츠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 축구 굴기 내세워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을까?

다시 축구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중국의 발전전략 뒤에는 '굴기(屈起)'라는 두 글자가 종종 등장한다. 제조업 굴기, 반도체 굴기, 항공우주 굴기 등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고급인재를 빨아들이며 핵심산업에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모습으로 비치기도 한다.

축구에도 굴기가 붙어 있다. 아직은 길이 험난해 보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정부의 막강한 지원과 과학기술에 힘입은 축구 굴기를 내세워 세계 축구 무대에 발을 내딛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2026년 열리는 월드컵부터 48개 국가에 출전권이 주어지면서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애한교직이라 묘사한 중국과 축구와의 관계가 간절함으로 바뀌고, 간절함이 환골탈태를 이뤄낸다면 말이다.



강민주
KOTRA 중국지역본부 차장
minzhu337@kotra.or.kr

격랑의 국제 기후대응 메커니즘 논의, 국제개발협력의 전략적 역할은?

최근 들어 유럽의 폭염, 동남아시아의 돌발 홍수, 아프리카의 극심한 가뭄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에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이례적으로 비부속서 국가의 제안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기후금융 메커니즘인 '손실과 피해' 기금의 설립이 결정됐다. 이 기금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국가들의 손실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기후정책에서 도외시되거나 탄소감축의 회피책으로 여겨지던 기후적응이 재조명된 것이다. 그러나 기금 규모 및 조달방안, 운영규칙 등 주요 사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2009년 선진국이 약속한 기후재원 공여가 목표치인 연간 1천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 행동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메커니즘 통한 탄소감축 본격 시동 앞두고 감축실적 산정 및 승인 문제 등이 쟁점

국제 기후담론이 합의와 행동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2021년 COP26에서 합의된 국제 탄소시장 세부이행 규칙 제6조의 탄소감축 방안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탄소배출의 단위당 시장가격으로 배출권을 거래하는 협력적 시장 메커니즘이 있다. 또 다른 방안은 대가성 거래 없이 비부속서 국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지원함으로써 2015년 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비시장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은 감축사업 유치국의 기후적응을 비롯한 역량강화, 기술 이전, 자원 조달, 탄소세(국경세) 도입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지난해 8월 25일 파키스탄 나와브샤에 폭우가 내려 사람들이 물에 잠긴 거리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방안 중 그동안 주목받아 온 것은 협력적 시장 메커니즘이다. 이 메커니즘에서는 당사국 모두가 '상응조정'을 통해 국제이전감축실적(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배출권거래제 운영경험과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프로젝트성 거래시장의 구축사례를 토대로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신뢰도 높은 국제 탄소시장이 출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당사국이 시장을 통한 신속하고도 비용 효과적인 NDC 달성을 위해 국제 탄소시장에 참여하길 희망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 메커니즘의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있다. 첫째, 감축실적 산정 및 승인 관련 기술 문제다. ITMO 승인은 당사국 간 감축실적 규모와 품질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감축사업 기초선 및 추가성(additionality) 검증 방법론 정립, 유치국의 탄소인벤토리(배출 목록) 및 국가감축등록부 구축 등 감축실적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장치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무엇보다 승인 당사자인 유치국의 측정·보고·감축(MRV)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국제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가 재정 여력이 감소한 가운데, 대안으로 거론되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005년 파리에서 선언된 원



지난 11월 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집트에서 열린 COP27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 기간 비부속서 국가들이 제안한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 등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극적으로 채택됐다. ©연합뉴스

조효과성 원칙에 따라 감축사업에 투입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경영 리스크 심화로 주력 사업 외 투자 철회가 이어지고, 배출권 거래제 가격 하락으로 민간 기업의 사업 참여 인센티브가 낮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개의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탄소감축실적을 유치국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자국 NDC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이중 계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 정부는 정부 간 양자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협력국의 정책 변화, 미온적 태도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MRV 역량 강화, 감축사업 규모화 등으로 시장 작동 보완하고 비시장적 접근법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도 병행할 필요

이와 같은 리스크를 상쇄하고 시장 메커니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이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국가지정기구(NDE)의 MRV 역량을 강화한다면 완결성 있는 인벤토리가 구축됨으로써 감축실적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장기 기후전략 및 국가개발목표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도입해 국제 감축사업을 규모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축사업의 효과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비부속서 국가 투자에 대한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ODA 예산을 일부 혼합하거나 사후 ODA 비율을 제하고 ITMO를 이전받는 방식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결과 기반 기후금융을 통해 유치국과 사전에 합의된 결과가 달성됐을 경우에 한해 ITMO 판매금액으로 감축활동에 투입된 비용을 투자국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이때 투자국은 다시 기후금융 재원을 보충해 재원 조달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감축사업 유치국이 자체적인 탄소감축 대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치국의 기후기술 성숙도와 기술개발의 한계비용을 고려한 지원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활용한 정책자문이 중요하다. 이때 해당 국가의 탄소배출량 및 중점 감축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상쇄를 통한 탄소감축 의사, 국제사회의 지원을 전제로 한 조건부 감축목표를 검토한 후 유치국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탄소감축 대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 및 기술협력, 규제, 재정 방안, 집단행동, 모니터링 및 통제 등 비시장 접근법이 고려될 수 있다. 비시장 접근법을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을 감축사업 사전단계로 혹은 감축사업과 함께 진행한다면 감축사업의 혜택이 투자국뿐만 아니라 유치국에도 돌아간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즉 당사국 간 거래비용 감소를 통해 ITMO 이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유치국의 기후적응을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부속서 국가(투자국)는 탄소감축을, 비부속서 국가(유치국)는 기후적응이라는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ITMO 승인의 패를 쥐고 있는 유치국의 환경과 수요를 고려한 개발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감축과 적응을 모두 아우르는 선도국가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황금물결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성과평가팀 전문연구원
gyul.hwang@kdi.re.kr

새해, 당신의 신년 운세는 어떠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초, 너무 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사다. 사람에 따라 살아온 시간도, 바라는 바도 다르겠지만 새로운 해가 좋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 우리는 그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를 하고, 신년 운세를 확인한다. 포털사이트에 신년 운세라고 치면 토정비결, 별자리 운세, 신점, 타로점 등 다양한 운세가 바로 눈앞까지 배달된다.

정작 이 글을 쓰는 나는 신년 운세를 잘 보지 않는 편이다. 소심하고 비겁한 마음 때문이다. 불길한 운세가 나오면 어쩌지? 무시하려고 해도 신경 쓰이지 않을까? 어차피 안 좋다면 왜 굳이 그 사실을 미리 알아야 하지? 복은 많이 받고 싶지만 안 좋은 운세는 외면하고 싶은 사람인 것이다.

동양의 운세 풀이에 토대가 되는 것은 '역(易)' 혹은 '주역'이라 불리는 책이다. 『주역』은 공자와 맹자의 유학과 노자와 장자의 도가철학 모두를 주요 경전으로 다룬다. 오늘은 유학의 관점에서 『주역 계사전』과 함께 운세의 길흉화복을 생각해 본다. 본래 『역』은 점을 치는 책이다. 하지만 『역』의 논의는 그보다 심오하다. 유학과 도가철학을 모두 다루고 있는 데다 점을 칠 때 길하거나 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좋음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역 계사전』에서는 길(얻음)과 흉(잃음) 자체보다 회(悔)와 린(吝)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한다. 회는 '후회'하다라고 하듯, 뉘우치는 마음이다. 린이란 '인'색하다 할 때의 의미와 통하며, 부족하고 그로 인해 부끄럽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후회하거나 부족해 부끄럽다는 건 누가 봐도 좋은 뜻이 아닌데, 왜 이것이 길과 흉보다 더 중요할까?

우리는 대개 좋거나(길), 나쁘다고(흉) 할 때 대학에 붙거나, 취직하거나, 수익이 생기는 것 등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사건을 떠올린다. 그러나 삶은 사건의 단순 나열이 아니다. 사건에는 반드시 나의 마음과 태도, 결과가 따라온다. 그래서 길과 흉에도 언제나 회와 린의 마음이 따라온다.

좋은 사건을 만나면 사람의 마음이 들뜨기 쉽다. 마음이 들뜨면 주변을 잘 살피기 어렵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이어지면 자신을 과신하고, 경솔하게 움직이기 쉽다. 그러다 보면 아쉽고 부족한 점이 생기기 마련이다.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준비를 더 해야 했어' 등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반성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 좋지 않은 일이 장기적으로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길도 흉도, 그 순간에 머물지 않고 변'화'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변화하여 결국은 '복'되도록 만드는 일일 것이다.

회린의 마음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마음을 염두에 두는 삶의 태도는 지난 일을 돌아볼 때 개별 사건을 성패로만 평가하지 않고 사건의 앞뒤까지 살펴보며 자신의 넘치거나 부족했던 점을 생각하게 한다. 무엇보다 일을 만들기 전에, 그리고 일을 진행하면서 회와 린의 태도를 잊지 않는다면 그 일 자체나 일이 불러온 감정 자체에만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일이 과하거나 모자라 후회되거나 부끄러울 수 있다는 마음을 염두에 두면, 스스로 거리를 두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기객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에 충실하게 사는 일은 역설적으로 '지금'이 전부가 아니며, 그 지금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반드시 어제가 되고, 내일은 다시 지금이 되기 때문이다.

진실된 삶은 그 변화와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역』은 말한다. 2023년 새날, 나의 지금을 만들어준 과거와 앞으로 다가올 지금이 커다란 흐름 속에 계속 변화하며 진실되고 조화롭기를 희망한다.



허유선
『인생에 한 번은
나를 위해 철학할 것』 저자
jhheo@oztechwide.com

게임사고의 현실화

1인분 해내다

1인분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1인분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각자 다를 것이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1인분은 메뉴판에서 '1인분 주세요'가 아닌, 팀플레이에서 '1인분의 몫을 해내는가'의 1인분이다. 소셜빅데이터에서 지난 3년간 '1인분+해내다' 언급량이 3.65배 증가했다(<그림> 참고).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1인분은 하자', '1인분을 하고 싶다', '1인분을 해내는 법' 등의 말을 점점 더 많이 한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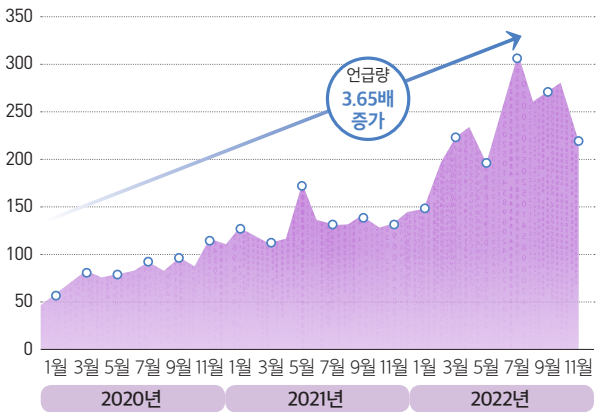
'1인분을 해낸다'는 담론은 게임에서 출발했다. 여럿이 팀플레이를 하는 경우 게임 전적 검색 사이트에 가보면 나와 우리 팀원들이 각각 몇 인분씩을 했는지 볼 수가 있다. ID:OOO 1.8인분, ID:XXX 0.8인분…, 이런 식으로 게임에서 각자가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숫자로 명확히 표시된다. 팀의 승패와 무관하게 팀원 각각의 플레이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게임 전적 검색 사이트의 1인분이 스포츠, 과제, 회사, 인생으로 확장된다.

사용 상황을 보면 이런 식이다. 처음엔 게임 팀플레이에서 1인분을 제대로 해내자는 의미로 쓰였다. "롤은 저한테 잘해야 본전인 눈치 보이는 게임입니다. 친구들과 롤 하는 게 긴장되지 않고 미안하지 않게 최소한 1인분을 하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쓰였던 게, 스포츠로 확장돼서 "손흥민 선수 참 대단하다. 유럽에서 1인분 이상 하는 사람이 한국에 언제쯤 다시 나올까?"라고 쓰였고, 학교 과제를 할 때도 "팀플 때 제발 1인분은 하자. 과 특성상 팀플 진짜 많은데 1인분 하는 게 사람과 사람 간의 최소한의 예의지"라고 쓴다. 현실 삶에서도 1인분을 계산하고 1인분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회사도 예외는 아니다. "회사에서 아직 1인분도 못 하고 있는 친구가 대학원 다닌다고 하니…." 회사에서도 1인분을 생각하고, 인생에서도 1인분을 생각한다. "34살에 9급 일행 합격하면 늦은 건가요? 뭐 1인분 한다는 거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고…."

'1인분'과 함께 언급되는 단어를 살펴보면 선수, 손흥민, 박지성, 멤버, 직원, 팀원 등 팀 활동에 연관된 인물 키워드가 주를 이룬다. 1인분은 혼자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협업하는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게임의 사고방식이 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는 경우가 있다. 게임을 몰라도, 게임은 안 해도 게임적 사고방식은 시대를 이해하는 주요한 요소다. 게임에서 시작한 1인분 사고방식은 팀이 잘한 것과 내가 잘한 것은 구분된다는 사고이고, '나는 내 역할을 다하겠다, 너도 네 역할을 다해라'라는 사고다. 1인분은 덜 해도 안 되지만 더 해도 억울한 것이다. 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또 1인분 이상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된다. 좋은 팀원이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다. 1인분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팀, 그 안에서 자기 몫을 정확히 해내는 것. 1인분은 그러한 사고의 대표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1인분은 1인가구 증가와 관련이 있지만 반드시 가구 구성원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혼자 살아도, 같이 살아도 온전한 자신의 몫을 해내는 것은 중요하다. 4인가구 대척점으로서의 1인가구가 아니라 1인분의 몫을 해내는 독립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진 개인을 바라보자. 그 개인이 모여 가족을 이루고, 그 개인의 선택이 모여 트렌드가 된다.

<그림> '1인분+해내다' 언급량 추이 (단위: 건수)



자료: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트위터·블로그·커뮤니티(2020.1.1.~2022.11.30.)



박현영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장, 『트렌드노트』 시리즈 공저자
hypark@vaiv.kr



마음 챙김 명상으로 시작하는 새해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한 가지 실천을 자신과 약속한다. 지난해 1월에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기'였다. 계속 실천에 옮기지 못하다가 목 디스크가 터지면서 어깨와 팔까지 방사통이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운동을 시작했다. 아, 좀 더 일찍 운동했더라면 목 디스크가 터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올해도 더 늦기 전에 전부터 마음먹고 있었던 일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명상!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곳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명상을 강조하다 보니, 과학 칼럼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낯설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과학자가 '마음 챙김(mindfulness)'으로 번역되는 선불교의 수행법에 뿌리가 닿아 있는 명상의 효용을 인정한다.

선불교의 수행법이 대개 그렇듯이 마음 챙김 명상도 말로 설명해 놓으면 아리송할 뿐이다. 최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자기 생각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데, 이런 상태가 가능하기는 할까?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가능한 한 잡생각 없이 지금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고른 호흡(복식 호흡)을 하는 방법.

과학이 밝힌 마음 챙김 명상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뇌의 감정영역과 의식영역을 할 수 있는 만큼 통제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서 잠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을 때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동안에도 우리 뇌는 신체가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쓰고 있다.

마치 TV가 꺼져 있는데도 리모컨 신호가 오면 언제든 작동하기 위해서 대기 전력을 소모하는 상황이라고나 할까. 만약 그때 당신이 골치 아픈 일, 마음 아픈 일을 겪고 있고, 걱정이 끊이지 않는 상태라면 소비하는 에너지는 더욱더 많아진다. 마음 챙김 명상은 놀랍게도 이런 심란한 상태에서 뇌의 활동을 진정시켜 준다.

마음 챙김 명상으로 뇌의 주요 영역 사이에서 오가는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과 골치 아픈 의식의 문제로부터도 해방감을 느낀다. 마음 챙김 명상이 우울증, 불안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의 재발률을 또렷하게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마음 챙김 명상을 꾸준히 하면 뇌 앞부분 신경세포의 활동을 자극한다. 이곳은 뇌에서 의식적 사고를 담당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마음 챙김 명상이 자기 성찰 능력을 향상하고, 자기를 지배하는 여러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장 유명한 명상원에 등록이라도 해야 할까. 아니다. 팬데믹 시기에 집에서도 혼자서 마음 챙김 명상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졌다. 조금만 검색해 보면 유튜브 콘텐츠도 셀 수 없이 많고, 무료나 소액 유료 결제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음 챙김 명상 훈련 앱도 다양하다. (나도 앱을 하나 받아뒀다.)

물론 명상하다가 되레 부정적인 경험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서 불쾌감을 호소할 수도 있다. 그러니 어렵지만 잡념(선불교라면 '번뇌'라고 했을까)을 없애는 일이 중요하다. 전문가는 새롭고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반복적인 선율이 두드러지는 음악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잡념도 많고 걱정도 많은 나도 그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하루 10분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강양구
지식큐레이터
imtyio@gmail.com

힙합적 탁월성에 매력적인 대중성까지



에픽하이 8집 앨범 <신발장> 커버 사진.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에픽하이(Epik High)를 좋아한다. 원래 좋아했지만 그들의 라이브를 보고 더 좋아졌다. 혹시 에픽하이 공연을 본 적 있나. 만약 없다면 꼭 한번 경험해 보라고 추천한다. 장담할 수 있다. 그들의 라이브는 최고 수준이다. 3인조로 할 때도, 풀 밴드와 할 때도 잊히지 않을 라이브를 들려준다.

바로 위 문장에 주목하기 바란다. 라이브의 핵심은 무엇보다 현장감이다. 그렇다면 이 현장감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 정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인간 육체가 지닌 물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이브 공연에 가는 이유가 뭔가. 뮤지션과 연주자의 입과 손길로 빚어낸 소리를 실시간으로 감상하기 위함이다. 그렇다. 그 소리에 매혹돼 신나게 뛰거나 부딪히고, 그도 아니면 깊이 감동받는 순간을 맞기 위해 우리는 공연장으로 향한다.

따라서 특별한 예외가 아닌 이상 풀 밴드 라이브가 3인조 혹은 MR(녹음된 반주) 틀어놓고 하는 라이브보다 강렬할 수밖에 없다. 나는 살아 있는 전설 에미넴(Eminem)의 라이브를 두 번 봤는데 한 번은 MR 라이브, 다른 한 번은 풀 밴드 라이브였다. 이건 뭐, 둘 중 후자 쪽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다. 이런 이유로 에픽하이가 멤버 3명으로만 하는 라이브에 처음 갔을 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적당히 보다가 나와야겠어"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 공연, 앙코르까지 해서 끝까지 다 봤다. 그들은 말 그대로 선수였다. 단 3명으로, 환상적인 호흡을 뽐내면서 관객을 들었다 놨다 했다. 하긴 그들이 그룹을 결성한 해는 2001년, 저 공연이 있기까지 15년 이상을 지지고 볶고 했을 것이다. 해체 위기까지 간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에픽하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체가 됐다. 달랑 3명이었음에도 풀 밴드 라이브 못지않은 라이브를 선사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당연히 아니었다. 1집을 발표하기 전에는 사기를 당해 발매가 불발됐고, 뿔뿔이 흩어져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그들이 처음 주목받은 건 2003년이었다. 마침내 기획사 계약에 성공한 뒤 발표한 <Map of the Human Soul>이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둔 동시에 힙합 마니아들에게도 찬사를 얻어낸 것이다. 여기에 바로 에픽하이 세계의 요체가 있다고 본다. 그들의 음악은, 힙합적인 관점에서 탁월한 와중에도 매력적인 대중성을 잃지 않는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실패한 적이 거의 없다.

좋은 곡이 너무 많아 일일이 적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정도면 힙합 잘 몰라도 무조건 호감 갈 것이 분명하다" 싶은 노래만 꼽아본다. 가장 거대한 성공을 거둔 노래라면 아무래도 윤하가 참여한 '우산'을 빼놓을 수 없다. 2005년 발표한 3집 <Swan Songs>의 타이틀 'Fly'는 무려 동방신기를 꺾고 가요 순위 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 이 외에 'Top Gun'(2009), '트로트'(2009), 'Run'(2010), '춥다(Feat. 이하이)'(2012)를 추천하고 싶다.

이제 앨범으로 선택해야 할 차례다. 2014년 <신발장>이 내 기준에 영순위다. 아마도 에픽하이가 발표한 베스트 오프너일 '막을 올리며'를 시작으로 '신발장'에 이르기까지 빠지는 곡 하나가 없다. 이 음반에서 에픽하이는 뭐랄까. 진지하면서도 무겁지 않고, 욕설을 내뱉는 와중에도 품격을 잃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조원선의 무심한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활용한 '막을 올리며'와 'Amor Fati(Feat. 김종완 of Nell)'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Amor Fati'의 다음 랩 가사로 글을 맺는다. 내가 아는 한, 한글로 써진 랩 가사 중 이보다 완성도 높은 경우는 많지 않다. 곱씹어 본 뒤 음악을 감상하면 감동이 배가될 것이다.

"멀쩡한 다리 꺾고 목발을 짚게 하는가/허기지면 독사과 씹게 하는가/손에 손 대신 총, 칼을 쥐게 하는가/당신들은 깨끗한가/멀쩡한 날개 꺾고 왜 땅을 기게 하는가/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하는가/죄 없는 자는 돌 던져도 된다는 말인가/돌 던지는 건 죄가 아닌가"



배순탁 음악평론가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 작가
greattak@hanmail.net

이 글은 한국소비자원 웹진 '소비자시대' 2023년 1월호 '상품 테스트' 기사를 전재한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1마리 열량, 1일 섭취기준보다 최대 1.5배 높아

최근 배달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치킨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2016년 4조9천억 원이었던 치킨 전문점 시장규모는 2021년 기준 7조5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합리적으로 구매하도록 돕고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10개 브랜드의 치킨 24개 제품을 시험·평가했다.

글 **한샘**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 책임연구원



프랜차이즈 치킨 테스트 브랜드

※ 2022년 5월 구매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했음.
※ 2022년 8월 제조업체에 확인한 가격이며, 구입 시기 및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KYOCHON 교촌치킨 | Goobne No.1 Oven Roasted Chicken 굽네치킨 | 네네치킨 | 노랑통닭 | bb·q BBQ
bhc BHC | 처갓집양념치킨 | 푸라닭 치킨 PURADAK CHICKEN 푸라닭 | HOSIGI 호식이두마리치킨 | 맛있는 치킨 60계 60계

중량 및 품질 테스트

Q 나트륨과 당류, 얼마나 함유돼 있을까?

A 치킨 100g 기준 나트륨 평균 427mg, 당류 평균 7.4g 함유

치킨의 뼈를 제외하고 먹을 수 있는 부위 100g당 나트륨 함량은 평균 427mg(257~513mg). '소이갈릭치킨 마늘/간장맛(네네치킨)'의 함량이 513mg으로 가장 높았고, '교촌오리지날 마늘/간장맛(교촌치킨)'이 257mg으로 가장 낮았음.

당류는 치킨 100g당 평균 7.4g(0.9~18.5g) 함유. '교촌오리지날 간장/마늘맛(교촌치킨)'의 함량이 0.9g으로 가장 낮았으며, '쇼킹핫치킨(네네치킨)'과 '땡초불꽃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은 각각 18.5g, 12.6g으로 시험대상 제품 중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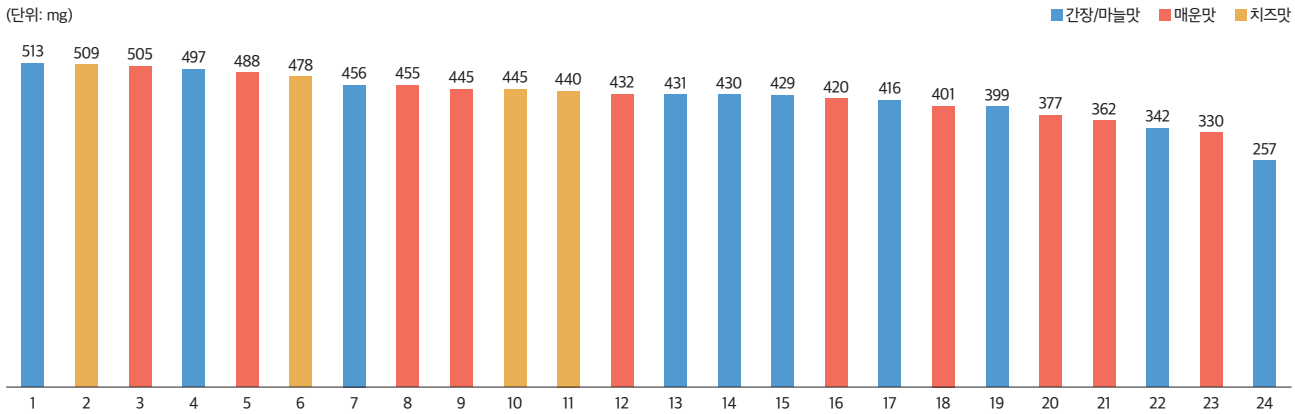
Q 프랜차이즈 치킨, 중량 차이 있을까?

A 제품별 최대 2배 가까이 차이나

시험대상 24개 제품 중 매운맛 제품인 '쇼킹핫치킨(네네치킨)'이 1,234g, 치즈맛 제품인 '슈프림골드양념치킨(처갓집양념치킨)'이 1,101g으로 중량이 큰 편. 반면 간장/마늘맛 제품인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은 625g으로 전체 제품 중 중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제품별 100g당 나트륨 함량 비교결과>

(단위: mg)



1	소이갈릭치킨(네네치킨)	7	골드킹(BHC)	13	와락치킨(처갓집양념치킨)	19	갈릭마왕(굽네치킨)
2	치즈스노윙(네네치킨)	8	고추마요치킨(푸라닭)	14	간장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20	고추바사삭(굽네치킨)
3	핫황금올리브레드착착(BBQ)	9	쇼킹핫치킨(네네치킨)	15	간지키친(60계)	21	교촌레드오리지날(교촌치킨)
4	블랙알리오(푸라닭)	10	뿌링클(BHC)	16	맛초킹(BHC)	22	간장THE한치킨(노랑통닭)
5	땡초불꽃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11	슈프림골드양념치킨(처갓집양념치킨)	17	소이갈릭스(BBQ)	23	고추장THE한치킨(노랑통닭)
6	치즈바사삭(굽네치킨)	12	고추치킨(60계)	18	매운불양념치킨(처갓집양념치킨)	24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

표시 적합성

Q 영양정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을까?

A 10개 업체 중 4개 업체 표시

시험대상 업체 10개 중 4개 업체(교촌치킨, 굽네치킨, BBQ, 호식이두마리치킨)만 관련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었음. 치킨 영양성분*의 경우 표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가맹점에는 조리법 준수를 강조하는 영양성분 가이드가 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섭취하려는 제품에 대한 참고정보가 될 수 있음. 업체들은 표시정보 오류 및 분석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자발적 참여를 주저하고 있었음.

*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어린이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점포 수 50개 이상)은 판매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할 의무가 있으나, 치킨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가격 비교

Q 치킨가격, 차이 있을까?

A 한 마리당 16,000~22,000원

시험대상 24개 제품의 치킨 한 마리당 가격 비교 결과, '교촌오리지날 간장/마늘맛(교촌치킨)'과 '간장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이 16,00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슈프림골드양념치킨 치즈맛(처갓집양념치킨)'이 22,000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남.

안전성 테스트

Q 섭취 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없는가?

A 산가* 시험결과, 전 제품 기준에 적합

* 유지(油脂)가 장기간 사용·저장될 경우 생성되는 유리지방산 함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유지의 품질을 나타내며, 산화(산패)가 진행될수록 수치가 높아짐.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조리 시 튀김용 유지의 산가는 3.0 이하여야 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2-56호).

치킨 먹기 전에 기억해야 할 TIP



치킨 한 마리 열량은 1,554~3,103kcal로, 1일 에너지 필요 추정량(2천kcal, 성인 여성 기준) 대비 적게는 78%에서 많게는 155%까지 차지한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치킨을 먹을 때 한 번에 반 마리를 먹는다는 응답률이 49%로 가장 높았는데 치킨 반 마리를 콜라 1캔과 같이 먹을 때의 당류 섭취량은 1일 기준치의 52%(52g), 맥주 1잔과 함께 먹는 경우 섭취하는 열량은 1,290kcal로 1일 필요 추정량의 65%에 달한다.

치킨은 기름에 튀겨 조리하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높고, 첨가되는 양념소스에 나트륨과 당류가 다량 함유돼 있으므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동유럽의 낭만과 역사를 품은 도시

프·라·하

체코 프라하는 동유럽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이다.
동유럽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어느 곳보다도 잘 담고 있기 때문이다.
프라하의 대부분 건축물은 중세 이후 고스란히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청사 종탑에 올라 고풍스러운 도시를 조망해 보는 일은 다른 곳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멋진 일이다.
카를교를 거닐면서 평화로운 블타바강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추천한다.



대부분의 유럽 도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에 도심 중앙에 오래된 구시가 광장이 자리한다. 그러나 프라하의 구시가 광장은 좀 색다르다. 고색창연한 교회 건축물과 시청사, 궁전이 서로 하나가 돼 리드미컬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구시가의 구심점, 구시가 광장

광장 중앙에는 원형의 아름다운 기념비가 놓여 있다. 체코의 전신인 보헤미아 왕국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얀 후스의 순교 500주년을 맞아 1915년 7월 6일 세워진 기념비다. 얀 후스는 15세기 초 교회의 세속화를 비판하다가 성직을 뺏기고 콘스탄트 종교회의에 회부돼 심문받다가 1415년 화형을 당하고 만다. 그가 죽은 후 그를 신봉하는 세력이 황제에 반항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를 후스 전쟁이라 부른다.

광장 주변에 가득한 고풍스러운 중세 건축물 중에서 가장 주목할 건물은 구시청사



구시가의 강변에서 바라본 프라하 성 주변 모습.





다. 구시청사는 1338년에 세워졌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독일군에 의해 부속 예배당과 북쪽 건물이 파괴됐다. 지금의 구시청사는 그 이후 복구된 모습이다. 구시청사의 종탑에 올라가면 유럽에서 가장 멋진 도시 전경이 펼쳐진다.

구시청사 정면을 장식하고 있는 천문시계 역시 이 도시의 명물이다. 1410년 제작된 프라하 천문시계는 현재 작동하는 천문시계 중 가장 오래됐다.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시 정각에 열리는 천문시계쇼는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 그 시작은 이렇다. 앙상한 뼈만 남은 해골 형태의 죽음의 문지기가 한 손에 든 작은 종을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와 함께 오싹한 분위기 속에서 세기의 인형쇼가 시작된다. 이윽고 '딩, 딩, 딩' 아주 천천히 간격을 두고 종소리가 나면 두 개의 창문이 열리면서 예수의 열두 제자인 12사도의 밀랍인형이 십자가, 검, 성경책을 들고 모습을 드러낸다.

시계는 위, 아래 두 개의 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당시의 천동설에 입각한 우주관을 보여준다. 위쪽 원은 칼렌다륨이라 불리며 해와 달과 천체의 움직임을 묘사한 것이다. 바늘이 1년에 한 바퀴를 돌며 연, 월, 일, 시간을 나타낸다. 아래에 있는 원은 플라네타륨인데, 12개의 계절별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1968년 프라하의 봄을 상징하는 바츨라프 광장

바츨라프 광장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광화문 광장과 같이 양쪽 대로와 평행한 길쭉한 모양이다. 길이가 750m, 너비가 30m에 달한다. 광장의 이름은 10세기 체코 국왕 바츨라프 1세의 이름을 딴 것이다. 바츨라프는 경건한 크리스천으로 이 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큰 공헌을 했던 인물이다. 비록 비극적으로 동생에게 암살당하지만 죽은 후에는 국민들로부터 성인으로 추앙받게 된다.

또한 이 광장은 체코의 근현대사와 인연이 깊다. 1918년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했을 때 이를 기념하는 인파가 광장으로 몰려들었으며,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공화국이 이 광장에서 선포됐다. 무엇보다 올드무비 팬이라면 체코의 국민 소설가 밀란 쿤데라가 1984년에 쓴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영화화한 줄리엣 비노쉬 주연의 <프라하의 봄>(1989)을 기억할 것이다. 이 영화는 실제 일어났던 '프라

1 구시청사 종탑에 놓인 천문시계는 141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정시마다 시계 속에서 예수의 제자 등 인형이 등장한다.
2 국립박물관에서 바라본 바츨라프 동상과 바츨라프 광장 주변 모습.
3 구시가 광장의 거리악단.
4 블타바강 위의 백조들과 멀리 보이는 카를교.





3


4

하의 봄'을 모티브로 해 1968년 8월 이 광장에서 소련군 탱크에 저항했던 대규모 시위대의 모습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체코에서 가장 긴 강인 블타바강 위에 놓인 카를루프 다리(줄여서 카를교라고도 한다)는 구시가 광장과 프라하 성을 연결하기에 수많은 여행자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간다. 보행자만 오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석교는 621m 길이에 폭은 10m다. 다리 밑에는 16개의 아치가 다리를 든든히 받치고 있다. 다리 양 끝에는 고딕 양식의 건축물인 브리지 타워가 세워져 있는데, 남단의 브리지 타워에 올라 강가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

이 다리는 프라하의 성 비투스 대성당을 설계한 독일 건축가 페터 파를러가 1357년 착공해 15세기 초에 완성했다. 카를루프 4세 통치 기간에 놓여 카를루프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다리 위에는 바로크 양식의 성인 동상 30개가 세워져 있는데, 1683년부터 1714년 사이에 만들어진 원본은 지난 1965년 국립박물관으로 옮겨졌고 오늘날의 것들은 모두 복제품이다. 얀 네포무츠키 신부를 비롯해 30명의 성인 중 상당수는 14세기 말 성직자로 당시 보헤미아 왕국의 통치자였던 바츨라프 4세 국왕의 명령으로 카를루프 다리 위에서 블타바강으로 던져져 순교했다.

가장 큰 중세 고성, 프라하 성

프라하 성은 그야말로 프라하의 고고한 표상이다. 현존하는 중세양식의 성 중 가장 큰 성이기도 하다. 570m 길이와 130m의 폭, 약 23만㎡ 면적의 프라하 성 안에는 웅장한 성 비투스 대성당을 비롯해 성 조지 교회, 모든 성자 교회, 성십자가 교회 등 화려한 교회 건축물과 구왕궁, 여름 별궁 등 왕궁 건물이 들어서 있다. 황실 마구간은 현재 미술품 전시공간으로 개조돼 루돌프 2세 황제가 소장했던 회화 4천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길이 124m, 폭 60m의 성 비투스 대성당은 프라하 성의 랜드마크로 프라하의 대표적인 고딕양식 건축물이다. 교회 건축물 중 체코에서 가장 크다. 메인 타워의 높이가 96m에 달하는 이 건물은 가톨릭 성당 건물로 역대 보헤미아 왕들의 무덤을 안치하고 있다. 원래 이 자리에는 바츨라프 1세의 명령으로 10세기경 처음 교회가 지어졌고 1344년, 지금의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가 시작됐다. 그 후로 로마네스크양식, 고딕양식이 덧붙여지고 우여곡절 끝에 오랜 세월을 거쳐 1929년 지금의 성당이 완공됐다.

이렇듯 프라하에서는 시가지를 걷는 것만으로도 역사 속을 누비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시선을 옮길 때마다 의미와 역사가 녹아 있는 풍경을 만나게 될 것이다.



김후영
『언젠가 한 번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저자
gokeywest@hanmail.net

서민금융 재원으로서의 휴면예금 재정의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우리나라의 정책서민금융은 2008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등을 재원으로 한 미소금융으로 시작됐다. 당시 은행은 「상법」에 의거해 5년 이상 거래가 없어 채권소멸 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연간 1천억 원 이상 잡수익으로 처리해 오고 있었다.

정부는 2007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휴면예금법」)을 제정하고 2008년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출연받아 원권리자를 찾아주는 한편 이를 재원으로 미소금융을 지원했다. 2016년에는 「휴면예금법」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서민금융법」)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됐고, 서민금융 지원과 휴면예금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게 됐다.

우리나라 외에도 영국, 아일랜드, 일본,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 휴면예금의 원권리자를 보호하면서 휴면예금을 이용해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2001년 「휴면예금법」, 2003년 「휴면생명보험법」을 제정해 15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 계좌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5년 혹은 15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보험계약을 휴면예금 기금으로 이전해 관리하면서 빈곤층, 교육약자, 장애인 지원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영국은 2008년부터 1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고객예금을 반환기금(Reclaim fund)으로 이전해 관리하면서 공공기구인 빅 로터리 펀드(Big Lottery Fund)와 빅 소사이어티 캐피털(Big Society Capital)에 배분해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12월 「휴면예금활용법안」을 제정해 10년 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을 예금보험기구에 출연해 관리하면서 민간공익 활동 지원에 이용하고 있다.

휴면예금의 정의를 채권소멸 시효가 완성된 예금이 아닌, 일정 기간 예금자로부터 거래가 없는 비활동계좌로 바꿔 서민금융으로의 활용도를 높여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휴면예금을 채권소멸 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정의하다 보니, 금융회사의 장기 비활동계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장기 비활동계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금융회사가 보유하게 된다. 그 경우 금융회사가 원권리자 찾기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으며, 휴면예금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이용되지도 못한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은 해당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데 따르는 비효율성도 있다.

따라서 휴면예금을 일정 기간 예금자로부터의 거래가 없는 비활동계좌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 아일랜드, 영국 등 채권소멸 시효가 없는 국가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있는 일본에서도 일정 기간 예금자가 관리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휴면예금을 공익목적 사용을 위해 출연받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KDI 경제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디지털 나라경제를 만나보세요

1990년에 창간한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나라경제』를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세요.
『나라경제』의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nara.kdi.re.kr
www.facebook.com/kdinara1990

***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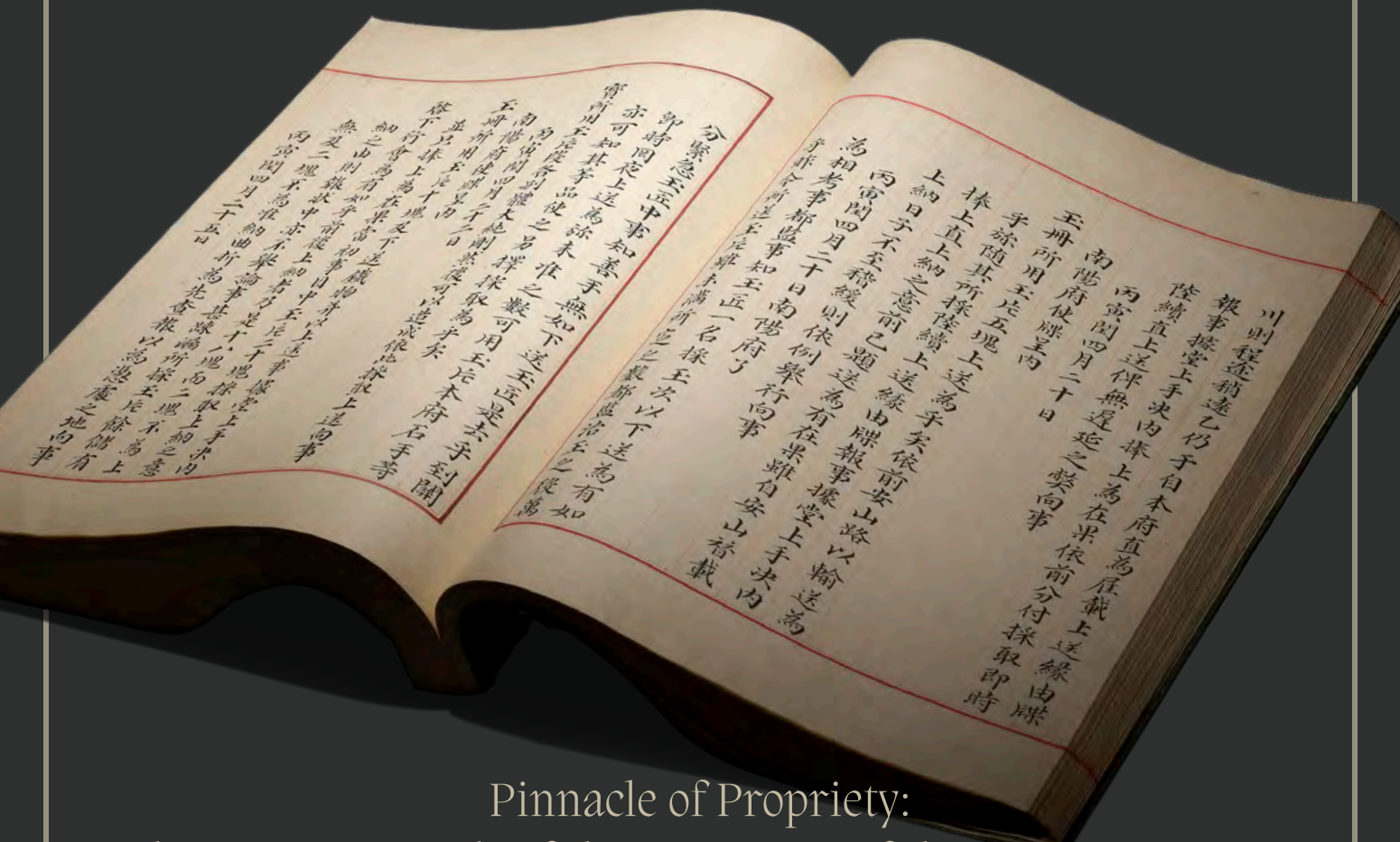
잡지를 읽고 난 소감, 제안 등을 이름, 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nara@kdi.re.kr)로 보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2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외규장각 의궤 귀환 10년 기념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外奎章閣 儀軌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Pinnacle of Propriety:
The *Uigwe*, Records of the State Rites of the Joseon Dynasty

2022. 11. 1. — 2023. 3. 19.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Special Exhibition Gallery, National Museum of Korea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